

수원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년 수원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6. 05.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제 출 문

수원시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 사업 「2016년 수원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5. 11.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대 표 이 진 수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권혁성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동연구자	이진수 수석연구위원(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김미혜 선임연구위원(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차종진 선임연구위원(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신나리 연구조원(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 차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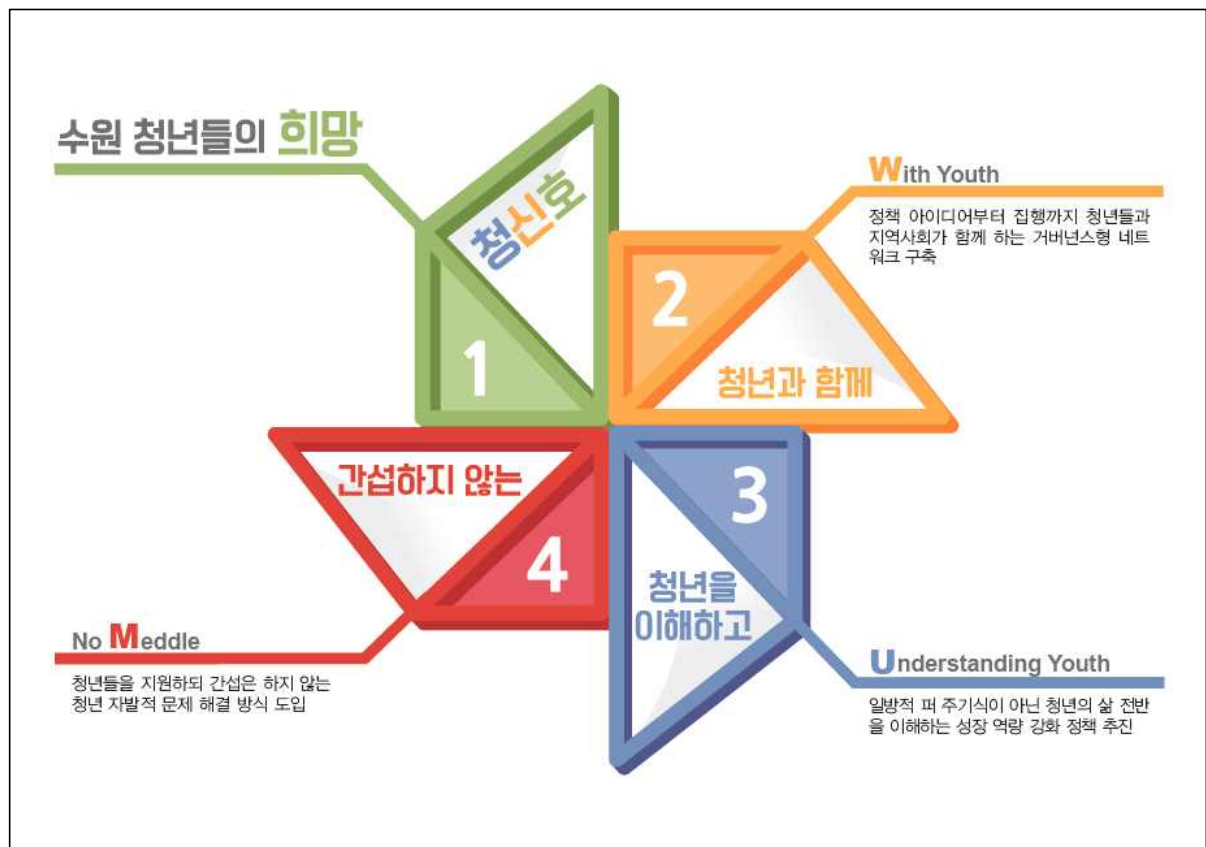
제1장 서론	2
I. 연구의 목적	2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청년다움, 청년지원센터 운영방안	9
I. 청년지원센터 일반	9
1. 청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지원센터의 필요성	9
2. 법적 근거로서 청년지원센터의 개념과 역할범위	9
3. 청년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및 지원대상 범위	9
II. 타 지자체 청년지원센터 운영현황	10
1. 개요	10
2. 서울시 청년허브	10
3. 광주 청년센터 “the 숲”	12
4. 울산 청년창업센터	14
5. 시사점	15
III. 수원형 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15
1. 청년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원칙	15
2. 청년지원센터 조직구성	17
3.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19
제3장 발돋움, 청년일자리정책	22
I. 청년실업	22
1. 청년실업의 의미	22
2. 청년실업 현황	24
3. 청년실업 정책	26
II. 수원시 청년실업	31
1. 수원시 청년 실업 실태	31
2. 경기도 청년실업 정책	32
III. 지방자치단체 청년실업 정책	33

1. 서울시	33
2. 부산광역시	35
IV. 수원형 청년실업 대응 정책 정립	42
1. 수원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초 및 방향성	42
2. 수원시 청년 일자리 원탁회의(가칭) - 수원시 청년일자리 정책수립 및 시행 통합 컨트롤 타워	43
3. 수원시 맞춤형 취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6
4. 수원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47
5. 청년 첫 일자리 지원 강화	48
6. 경력단절여성 취업프로그램	49
7. 비정규직 취업지원 프로그램	50

제4장 비움채움, 청년주거 및 금융정책 52

I.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의 발생	52
1. 저성장기조에 따른 청년주거 문제의 발생	52
2. 주거빈곤과 최저주거기준	52
3. 청년층의 주거현황	53
4.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과 평가	61
II. 해외 및 국내 타 지자체의 청년주거정책	63
1. 해외의 청년주거정책	63
2. 국내 타 지자체의 청년주거정책	67
III. 수원형 청년주거정책 정립	69
1. 수원시 청년주거정책의 개요	69
2. 구체적인 수원형 청년주거정책 제언	69
IV. 청년금융위기 개요	77
1. 사회구성원 진입을 위한 과도한 비용의 지출	77
2. 가계부채의 증가와 청년의 삶	78
3. 청년금융위기의 특징	79
V. 국내 청년금융정책	79
1. 중앙정부의 정책	79
2. 정부정책의 한계	81
3. 지방정부의 청년금융정책	81
4. 청년연대은행 토닥(사회적 관계 은행)	82

VI. 해외 청년금융정책	83
1.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83
2. 자산형성프로그램	83
3.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83
4. 채무탕감정책 및 운동	83
VII. 수원형 청년금융정책	84
1. 청년통장 개설 운동 및 금융미리배움터	84
2. 청년 통합금융복지센터 운영 - 생활자금지원, 부채탕감프로젝트, 수원형 청년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85
제5장 즐거움, 청년문화정책	88
I. 청년문화정책 일반	88
1. 청년과 문화	88
2.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	89
3. 우리나라의 청년문화정책	91
II. 해외 및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문화정책	92
1. 해외 청년문화정책	92
2.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문화정책	100
III. 수원형 청년문화정책 정립	105
제6장 결 론	114
【 참 고 문 헌 】	116
【 부록 1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정책 일람표	118
【 부록 2 】 수원시 청년정책 인포그래픽	126
【 부록 3 】 수원시 청년정책 매트릭스	130



수원 청년을 위한 청신호, 그 출발선에서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청년세대의 목소리”, “청년을 위한 정치”와 같은 말들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문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청년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다.¹⁾ 또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²⁾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청년정책이기는 하지만 청년의 현실점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하여 청년 세대 일각에서는 스스로 매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³⁾ 청년들이 모인 대안적인 공동체도 존재한다.⁴⁾ 이러한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 수원시도 2016년의 시정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청년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젊은 도시를 표방하여 “청년, 그리고 희망”이라는 기치아래 2월 하순경 청년정책관을 신설하였다. 앞서 주지했듯이, 중앙정부와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어놓은 청년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수원시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아야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 사업가로 구성된 청년정책 추진 준비단 회의에서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마련하였다. 즉, 수원시도 청년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본틀을 다진 셈이다. 이제 어떻게 수원시만의 특화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수립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구멍 메우기 식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수원시의 시정은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수원화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화성행궁을 복원하며, 수원천 복원공사를

- 1) 이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김용성, 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34권 제3호, 2012; 주경필, 성인도래기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1호, 2015; 박영정,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등이 있다.
- 2) 이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김형균 외 2인, 인재집적도시를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 종합정책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5; 신윤정 외 6인,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2015 등이 있다.
- 3) 이러한 청년 매체는 서울시 청년 허브(홈페이지: <http://youthhub.kr/>)가 대표적이다.
- 4)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⑨ 동네 경제권·공간공유·청년공동체·고민공유·청년 스스로 전환을 실험한다”, 한겨레 2016. 01. 13. 일자 기사, 기사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671.html, 최종검색일 : 2016. 05. 09.

추진하는 등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뒤이어 민선 3, 4기를 거치면서 수원을 교육 제1도시를 목표로 전국 최대규모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고테크노밸리 및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사업 추진 및 신속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찾기 위한 시정활동을 하였다. 또한 민선 5, 6기는 휴먼시티 수원의 기치 아래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계층 간 갈등을 봉합하여 미래사회를 지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청년정책을 접목시켜 수원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현재 청년들의 실태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청년의 범위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수원시는 2016년 4월 8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동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원시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 제1호에서도 역시 원칙적으로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탄력적인 적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국한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수원시는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기본계획에는 청년의 고용촉진·일자리 질 향상·창업지원,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의 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는 청년정책의 분야를 고용, 주거, 금융, 문화 분야를 중점 연구 분야로 선정하여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상생의 관점에서 수원시 내 산업체들이 청년정책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참여 방법 또한 모색할 것이다.

2) 내용적 범위

청년들의 생태에 적합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전을 구축한다. 수원시 청년정책의 비전은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청신호)”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즉, “청신호”는 현 시점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수원청년, 움(WU:M)트다”로 설정하여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움(WU:M)이란 희망의 싹이 새로이 돌아난다는 의미로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 청년을 이해하되 퍼주기식이 아닌(Understanding youth), 간섭하지 않는 네트워크(no Meddle)를 구축하여 청년 스스로가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이라는 네 가지 중점적인 전략분야를 선정하기로 한다.

첫째, 청년다움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전략이다.

둘째, 발돋움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비움채움은 청년들의 주거 자립성 강화 및 부채해결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세부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은 청년들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통 교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전략이다.

<그림> 수원시 청년정책의 비전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위의 세부전략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여 종전에 각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해왔던 청년지원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청년 일자리, 능력 개발, 주거빈곤, 부채경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원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수원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연구 및 비교연구 방법론을 채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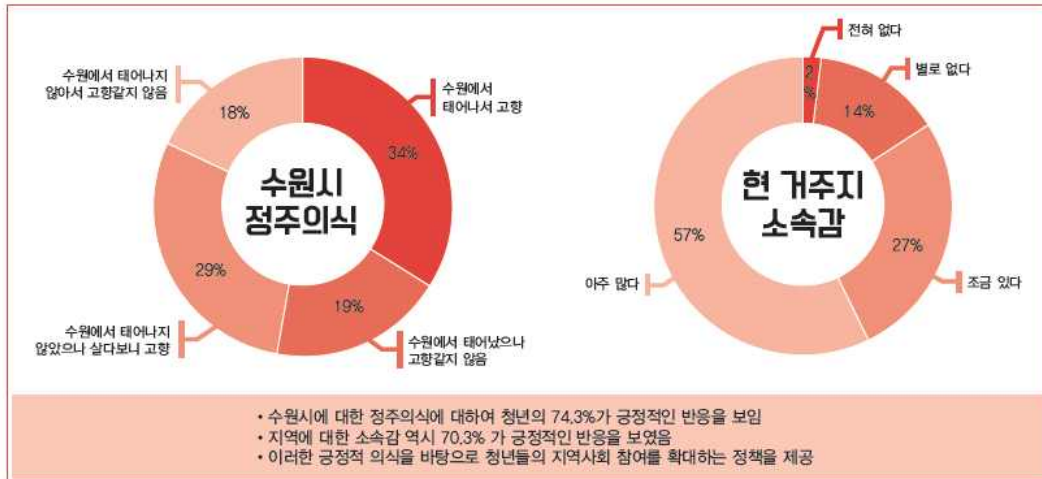
기존의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되었던 ‘청년정책’ 사례를 조사 및 수집하여, 해당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국내의 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개가 미흡한 정책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수원시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을 제시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표> 연구방법론

연구 방법	주요 내용
정책 제언	○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안을 수립
문헌조사연구	○ 관련 정책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 ○ 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등 선행연구 분석
비교법적연구	○ 주요외국의 청년 관련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시사점 도출

청년다움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자기 발전 역량 강화



② 청년(시민) 휴식 공간 조성

청년 문화예술 창작 및 교육, 공연 전시 공간 + 청년 생활체육 활성화

② 청년 토론의 장, "원손잡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의 의견수렴 + 민관 교류 활성화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틀 조성

제2장 청년다움, 청년지원센터 운영방안

I. 청년지원센터 일반

1. 청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지원센터의 필요성

수원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할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기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나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청년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에 청년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실현에 있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한다면 단순히 퍼주기 식의 정책제공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법적 근거로서 청년지원센터의 개념과 역할범위

수원시는 젊은 도시를 표방하여 “청년, 그리고 희망”이라는 기치아래 2016년 수원시의 핵심 정책을 청년에 맞추어 청년정책관을 신설하였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 사업가로 구성된 청년정책 추진 준비단 회의에서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기본조례를 마련하여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 조례 제16조에서는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청년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및 지원대상 범위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 제2항에서는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청년지원센터는 ①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③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④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⑤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⑥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

능을 한다.

또한 청년지원센터는 시청 내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II. 타 지자체 청년지원센터 운영현황

1. 개 요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지원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허브의 경우에도, 모든 분야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허브 내에 일자리사업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보다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광명시, 대전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2. 서울시 청년허브

1) 청년허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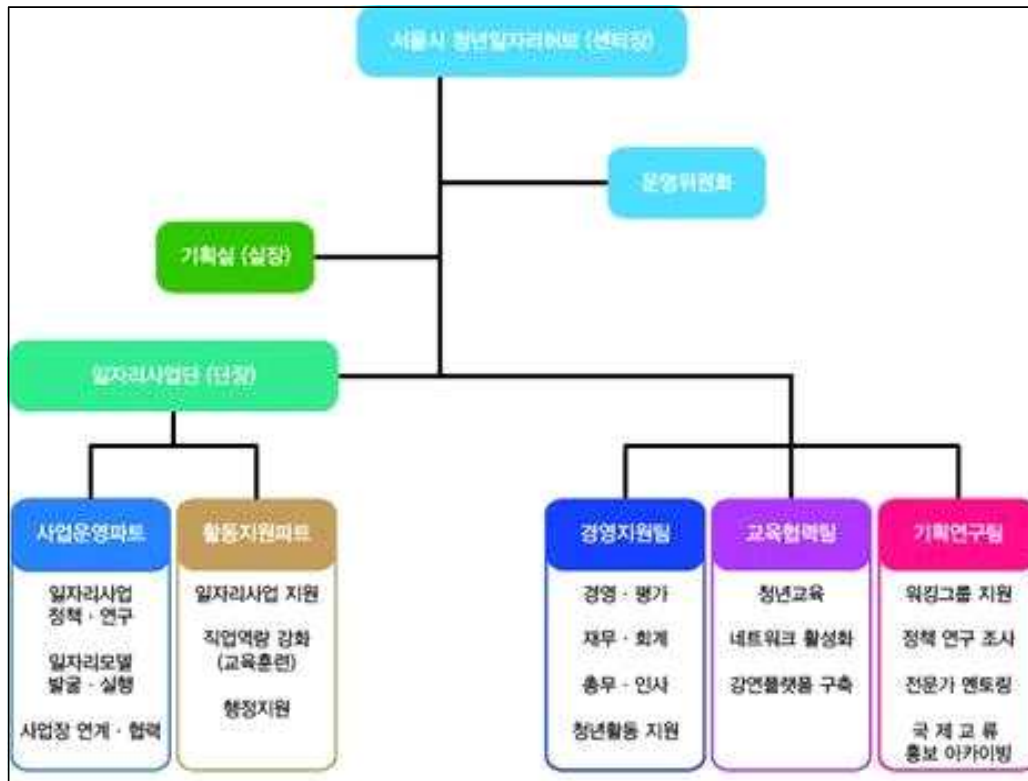
서울시의 경우, 청년지원센터인 “청년허브”⁶⁾를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8조는 청년허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 청년허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링크 :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8%98%EC%9B%90%EC%8B%9C%20%EC%B2%AD%EB%85%84%20%EA%B8%B0%EB%B3%B8%20%EC%A1%B0%EB%A1%80#AJAX>, 최종검색일 : 2016. 05. 26.).

6) 서울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참고 (링크 : <http://youthhub.kr/>, 최종검색일 : 2016. 05. 26.).

<그림> 서울시 청년허브 조직도



청년허브는 서울시에서 만들었지만 그 운영은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기관을 만들었으나 일을 직접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는 민간 위탁기관을 뽑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단체들이 경합을 벌여 뽑힌 민간업체 또는 기관이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입찰경쟁에서 선정된 곳이 지금 현재 **연세대 청년문화원**이다. 여기에서 청년허브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초기 조직을 구성, 현장에서 또는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성과를 통해 3년 더 위탁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허브의 운영은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나 인원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을 청년 및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공공성을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공공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인원 채용 같은 경우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초창기 멤버 15명을 제외하고 현재는 공채로 뽑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공공과 현장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력이나 경력도 보긴 하지만 어떠한 현장의 어떠한 영역의 경험이 있는지, 어떠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현재 청년허브에는 20명의 운영진이 존재한다. 하지만 청년허브에서 하는 사업들은 구조가 복잡하고 사업의 형식에 따라 인원수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단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년허브의 사업 중 하나인 국제 컨

퍼런스의 경우 국제교류관련 현장에서 전문가를 픽업을 하게 되면 2달에서 3달 동안 같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2) 청년허브의 조직구성

현재 청년허브의 조직 구조는 기획실 아래 일자리 사업단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이외에 기획연구팀, 교육협력팀, 경영지원팀 이렇게 1실 1단 3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자리사업단은 사업운영파트와 활동지원파트로 나뉘며 사업 운영 파트는 일자리 사업의 정책 및 연구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실행 그리고 사업장 연계와 협력을 업무로 하고, 활동지원파트는 일자리 사업 지원과 청년에게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업무, 행정적 지원업무를 한다. 2013년에는 뉴딜 일자리사업을 했으며 현재는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기획연구팀은 워킹그룹 지원, 정책 연구 조사, 전문가 멘토링, 국제교류 홍보 아카이빙의 기획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연구팀의 업무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연구팀은 워킹그룹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관련 사업에서부터 청년연구, 기획연구까지 폭 넓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상시 기획업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로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협력팀은 청년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강연플랫폼 구축의 업무를 맡고 있다. n개의 청년학교로 청년교육을 하고 청년참여 커뮤니티 반상회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팀은 경영, 평가, 재무 및 회계, 총무, 인사와 함께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년활, 미담이사무실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광주 청년센터 “the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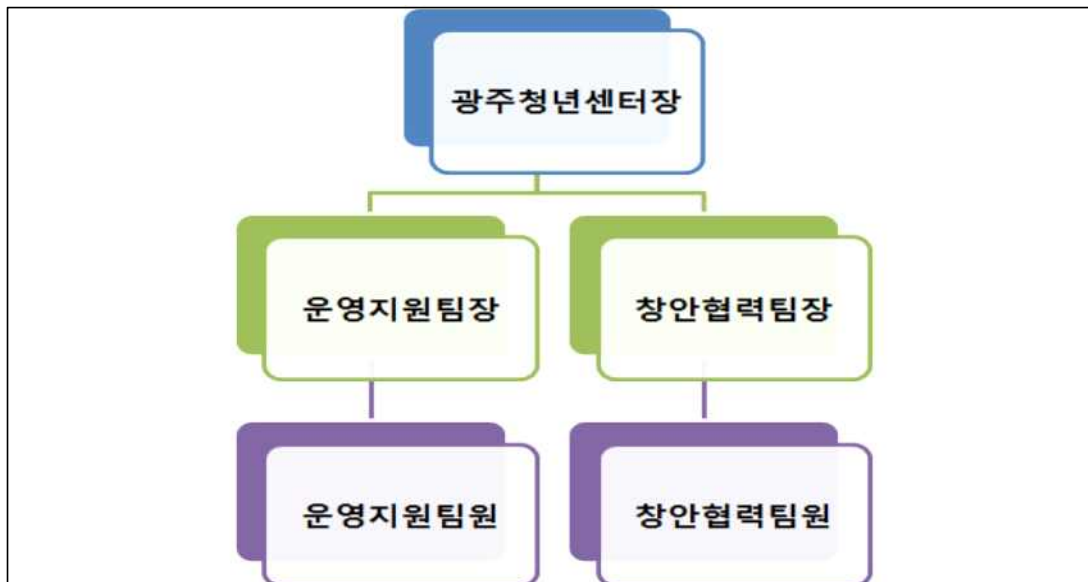
1) 광주 청년센터 “the 숲” 조직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청년센터의 기능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③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④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⑤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⑥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청년센터인 “the 숲”을 2015년에 개관하였다. “the 숲”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광주광역시 “the 숲” 조직도



2) 광주 청년센터 “the 숲” 조직구성

현재 청년허브의 조직 구조는 광주청년센터장 아래 운영지원팀과 창안협력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안협력팀에는 1인의 팀장과 2인의 팀원이 활동하고 있고, ① 지역과 청년들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연구하는 ‘청년도전사업’, ② 청년이 스스로 강사가 되어 청년문제에 대해 강의하는 ‘청년, 안성맞춤 프로그램’, ③ 강연과 오픈테이블을 병행하며 지역 이슈에 대해 토의하는 ‘상상미팅 프로그램’, ④ 청년들이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상담해주는 ‘토닥토닥 수다방’, ⑤ 아시아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아시아 커뮤니티 프로그램’, ⑥ 지역 내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광주 청(靑)책(策) 아고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지원팀에는 1인의 팀장과 1인의 팀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4. 울산 청년창업센터

1) 울산 청년창업센터 조직도

울산의 경우, 청년기본조례라든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예비 창업자들에게 울산광역시가 시설 및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울산청년 창업센터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울산 청년창업센터 조직도



2) 울산 청년창업센터의 조직구성

울산 청년창업센터는 센터장 산하에 울산청년CEO육성사업과 울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청년CEO육성사업은 경기침체로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울산광역시가 시설 및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이다.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매니저 3인, 행정매니저를 1인을 두고 있다.

또한 울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창업보육 총괄매니저 1인, 행정 매니저 1인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5. 시사점

서울시는 청년허브라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청년 스스로가 관계적 대표성을 갖도록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들 사이에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이한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수차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정책제안의 우선순위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배경에는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경쟁적 관계설정이 아닌 협력적 관계설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모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입장이 명확한 사람으로 리더십이 구축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다층적인 이해관계의 존재가 존중되고, 이에 기초한 합의와 조정에 의하여 형성된 새로운 ‘관계적’ 대표 개인에게 위기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께 위기를 분담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질서의 모색 및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에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수원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청년허브’는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우수정책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수원형 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1. 청년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원칙

1) 조직구성을 위한 기본방향

염태영 시장은 2016년 수원시의 화두는 ‘청년, 그리고 희망’으로 청년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최대한 담아보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⁷⁾ 이에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원시의 네 가지 원칙은 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을 것, ② 청년

7) "수원청년정책 "스스로 문제 이야기하고 대안 찾아야"", e수원뉴스 2016. 01. 28. 일자 기사, 기사링크 : <https://news.suwon.go.kr/main/section/view?idx=1014436>, 최근검색일 : 2016. 05. 26.

스스로 정책입안부터 실행까지 주도할 것, ③ 청년의 삶 전체로 정책범위를 확대할 것, ④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집행을 우선시할 것으로 정했다. 따라서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의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 관련 정책간의 효과적 협력과 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청년정책은 청년정책관 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은 청년의 생애주기별 및 각 분야별로 교육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사업들의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설되는 청년지원센터는 부서 간의 정책적 협력 및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청년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청년지원센터의 각 부서를 통해 개별 수요자들에게 전달되는 효과적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을 신중을 기해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관협력형 청년지원센터의 구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서비스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자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가 정책의 입안부터 시행까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단체들은 지역밀착형 조직으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협력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설립될 청년지원센터는 지역단위의 민간 청년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조직구성을 위한 대안 설정 기준

위와 같은 청년지원센터 조직구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첫째,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는 법적 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년지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역할 수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에 설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운

영규정에 대한 조례를 따로 둬으로써 청년지원센터의 주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련 지자체 조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서간 통합성을 지녀야 한다. 청년지원센터는 그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부서간의 정책적 협조와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청년지원센터는 단순한 조직이 아닌 강력한 정책 실행력을 가진 조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문제는 전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수혜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행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터진 구멍 막기 식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의 청년지원센터는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청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달체계의 실효성과 민관협력의 요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년지원사업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다수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 민간조직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지원센터는 기존의 지역 민간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혜자에게 전달하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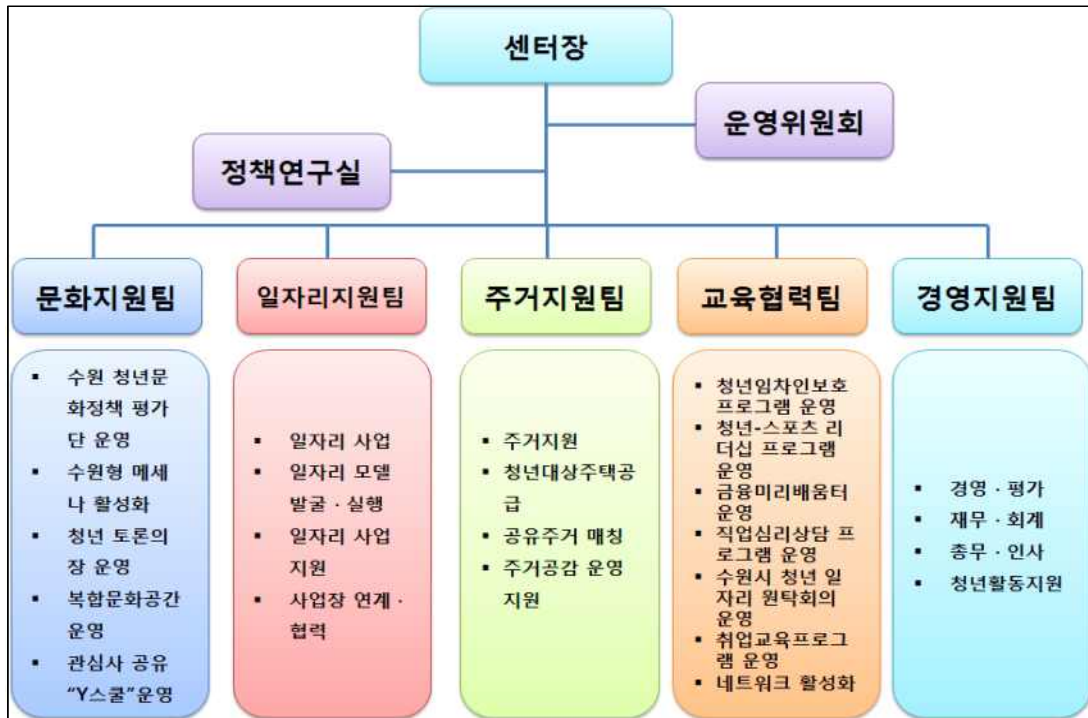
다섯째,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청년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1회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큰 방향성과 원칙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뿐만 아니라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청년지원센터 조직구성

1) 조직도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에서는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수원시는 향후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의 조직도(안)는 다음과 같다.

<그림> 청년지원센터 조직도



2) 조직별 기능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청년지원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이하에 정책연구실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문화지원팀·일자리지원팀·주거지원팀·교육협력팀·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된 5개의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각 팀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활동에 관하여 수원시청의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실은 위킹그룹 지원, 정책 연구 조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문가 멘토링 등의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는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문화지원팀은 수원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팀으로써 수원형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Y스쿨'을 운영하며, 수원청년 문화정책 평가단을 운영하는 업무 및 청년 네트워크 구축·교류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일자리지원팀은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원시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며, 청년-사업장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하였다.

주거지원팀은 청년의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대상 주택공급, 공유주거를 희망하는 청년 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 주거 문제 및 고민거리를 공유하는 주거공감 운영 등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하였다.

교육협력팀은 임차인보호프로그램, 금융미리배움터,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팀은 앞서 4개 조직의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3) 인적 구성 및 운영계획

실질적인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각 팀별로 팀장 1인,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된 팀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무범위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원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은 여러 부서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서비스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및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청년지원센터가 반드시 수원시청 조직의 한 형태로 기능하는 것보다는 현재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민관협력형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상 적합하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민간 주도의 조직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당해 조직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의 확고한 틀을 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수원시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제16조에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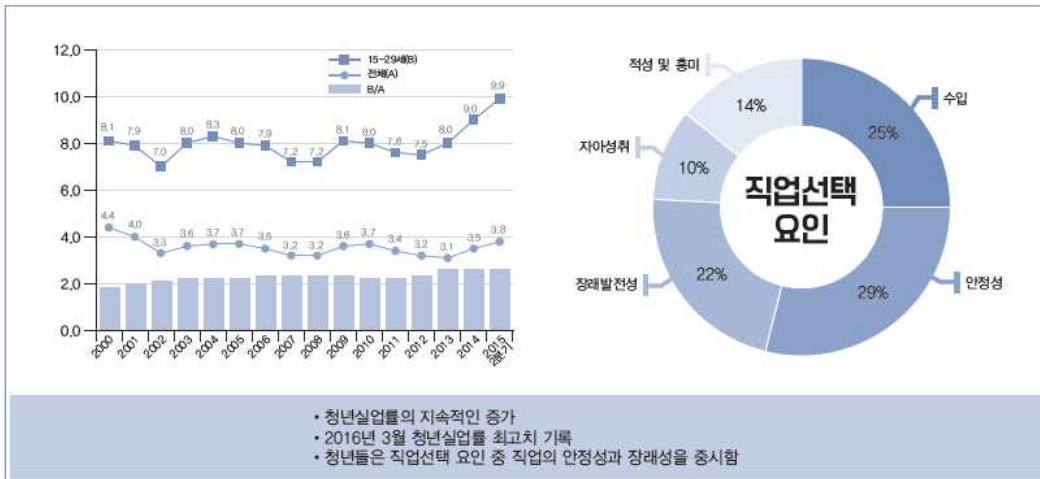
청년지원센터는 본래의 조정과 통합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타 지자체의 조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광명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한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처럼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지정하지 않아도 청년지원센터인 ‘청년허브’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원시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수혜자들에게 전달하는 기구로서 1회성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수원시만의 특화된 청년지원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당해 조례의 목적, 정의,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사업내용,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협조요청, 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발돋움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취업청년 직무능력 향상 맞춤형 교육 지원

수원시 산업구조 특성에 맞춘 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직무인력 인증서 발급

☞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조성

청년몰 기반 조성 + 창업교육 · 컨설팅 및 마케팅 · 홍보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

제3장 발돋움, 청년일자리정책

I. 청년실업

1. 청년실업의 의의

1) 청년의 범위

청년실업정책 또는 청년고용정책은 일정한 연령 범위 내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 청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청년’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이는 정책정립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통상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청년층의 스펙트럼은 그 집단에 속하는 자들의 보편적 특성을 상대화시킨다. 특히 직무경험, 수료한 교육, 실업 지속상태의 기간 또는 가족구성상태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자 또는 연구 대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그 범위가 탄력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청년실업 문제에서 청년을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⁸⁾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계 조사에 있어서는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⁹⁾ 좀 더 차이가 보이는 국가로 우간다에서는 청년을 12세에서 30세로, 나이지리아와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18세에서 3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에서 청년의 범위가 제각각인 이유는 결혼, 투표, 토지, 형사상 책임, 군복무 등에 관한 각 국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¹¹⁾ 이와 동일하게 2013년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그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청

8) OECD, Local Strategies for Youth Employment -Learning from Practice, 2015, 7쪽.

9) European Commission, Fact Sheet - EU Youth Guarantee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4102_en.htm, 최종검색일 : 2016. 04. 13.

10) 피터보겔/배충효(역), 청년실업 미래보고서, 30쪽.

11)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search/search.jsp>, 최종검색일 : 2016. 04. 13.

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세계기구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군복무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2-3년 정도 늦어지고, 최근에는 재수와 휴학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갖는 시기가 1-2년 정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¹²⁾

〈표〉 청년실업과 관련된 각 국의 청년의 범위

국제 단체 또는 국가	청년의 범위	국제 단체 또는 국가	청년의 범위
OECD	15세 ~ 24세	나이지리아	18세 ~ 35세
EU	24세 이하	방글라데시	18세 ~ 35세
우간다	12세 ~ 30세	대한민국	15세 ~ 29세

2) 청년실업의 정의

‘청년’ 범위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규정된다면, ‘실업’ 상태의 규정은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위에서 규정된 연령 범위에 있는 자 사회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청년실업상태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실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일이없음. 단 1시간이라도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보수를 받는일, 자영업 또는 가족회사나 가족 농장을 위한 무보수 노동포함)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것
-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 최근 4주 동안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참여했을 것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실업의 개념에서 ‘실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단지동 법의 적용대상은 청년 중 ‘미취업자’로 정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 청년실업의 의미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고민은 장소적으로 수원시로 제한된다. 청년실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 실행 대

12) 추문식,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쪽.

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의 대상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행력 있는 정책정립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정책의 대상자를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청년의 범위는 청년실업에 대한 국가시책과의 조화를 위하여 15세부터 29세까지로 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숙고되는 실업정책의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5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

2. 청년실업 현황

1) 국제적 현황

청년실업의 문제는 각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 구조 및 현재 경제 상태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에 관한 국제적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의 비교는 경제협력기구(OECD)의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015년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의 평균은 13.88%였고, 우리라는 평균 청년실업률 보다 낮은 10.52%로 38개 국가 중 8위에 위치해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5.57%)이며, 독일(7.25%), 스위스(8.57%)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가 발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듀얼(Dual) 시스템을 통하여 청소년기부터 일찍 직업세계로 편입되는 제도가 정착한 점을 들고 있다.¹³⁾

서구 선진 유럽국가 중 이탈리아(40.32%), 스페인(48.35), 그리스(49.80) 등은 매우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경제정책의 실패가 곧 청년 삶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청년실업과 관련된 각 국의 청년의 범위

순번	국가	청년실업률	순번	국가	청년실업률
1	일본	5.57	20	칠레	15.50
2	독일	7.25	21	슬로베니아	16.42
3	스위스	8.57	22	라트비아	16.30
4	아이슬란드	8.75	23	룩셈부르크	17.32

13) 김명화, 청년 실업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7쪽.

5	멕시코	8.61	24	헝가리	17.30
6	노르웨이	9.87	25	터키	18.52
7	이스라엘	9.24	26	스웨덴	20.32
8	한국	10.52	27	유럽연합	20.35
9	오스트리아	10.57	28	아일랜드	20.87
10	덴마크	10.85	29	폴란드	20.75
11	미국	11.60	30	벨기에	22.10
12	네덜란드	11.25	31	핀란드	22.02
13	체코	12.55	32	프랑스	24.67
14	OECD	13.88	33	슬로바키아	26.42
15	에스토니아	13.20	34	포르투갈	31.95
16	오스트레일리아	13.12	35	이탈리아	40.32
17	캐나다	13.17	36	스페인	48.35
18	뉴질랜드	14.66	37	그리스	49.80
19	영국	14.62	38	남아프리카 공화국	50.13

(출처 : OECD, Youth unemployment rate¹⁴⁾ 자료 재구성)

2)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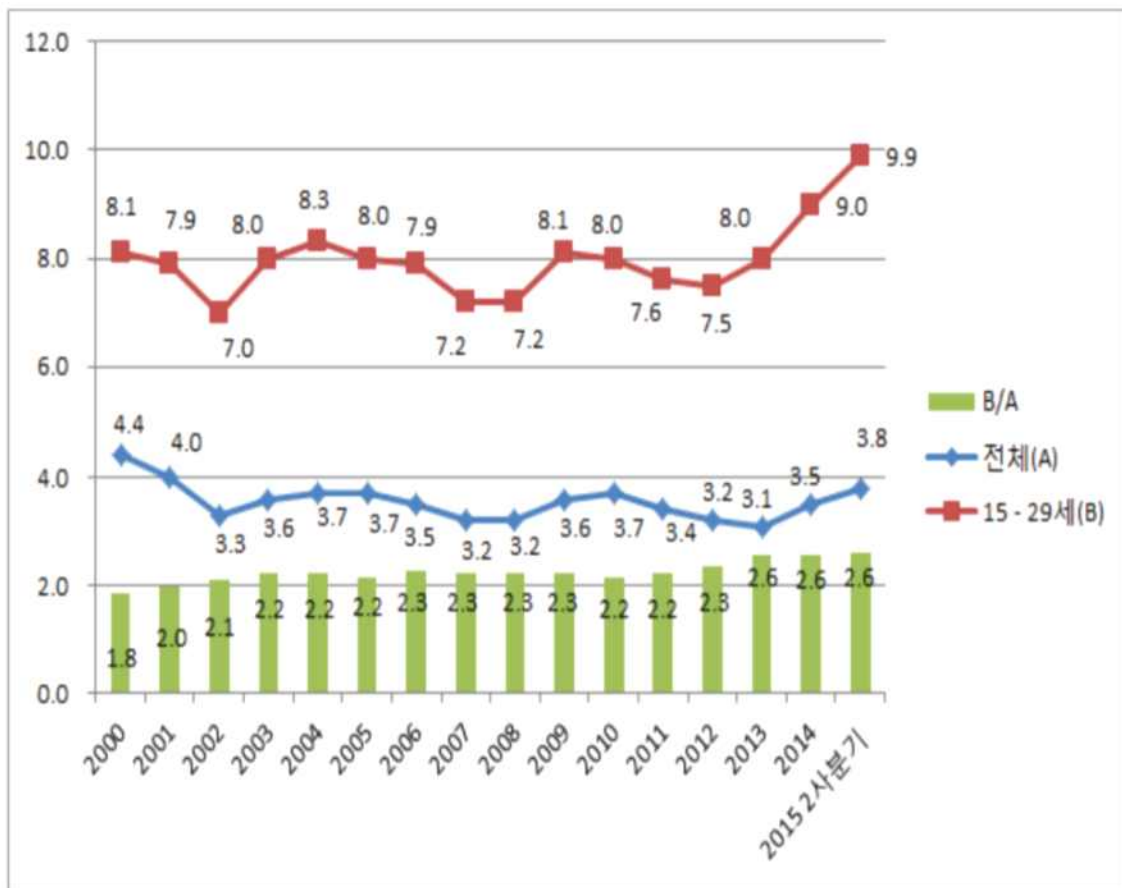
2015년 2사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8%이며, 청년 실업률은 9.9%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업률 통계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낸 통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업자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청년실업 상황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하여 약 2.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2배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https://data.oecd.org/unemp/youth-un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 최종검색일 : 2016. 04. 16.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기준 11.8%에 달하고 있으며, 3월 수치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¹⁵⁾ 청년실업의 문제가 전국가적 문제로 직시되고 그 동안 수많은 청년고용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주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추이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3. 청년실업 정책

1)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일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고용을 통한 실업상태의 해소에 집중한다. 이

15) 중앙일보, 청년실업률 11.8%(2016.01.16.) : <http://news Joins.com/article/19897110>, 최종검색일 : 2016. 04. 16.

때 고용정책은 잠재적 노동력에 일치하는 고용의 수준과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며, 모든 노동력의 완전한 고용을 보장하며, 지역 및 산업의 고용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국가와 여타 제도적 조치의 총합을 의미한다.¹⁶⁾

노동시장 정책은 경제정책 및 고용정책의 구체적 실현의 한 가지 방법이다. 노동시장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결함을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줄여가는 것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때 적극적 방법으로 노동력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데 주목을 두고 정보, 상담, 알선, 숙련 등을 구체적 조치로 상정한다. 이에 반해 소극적 노동정책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나 임금대체활동을 구체적 수단으로 한다.

〈표〉 고용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구 분		내 용
고용정책		• 잠재적 노동력과 고용 수준의 균형상태 형성 • 지역 및 산업의 고용구조 개선 • 궁극적으로 완전고용을 목표¹⁷⁾
노동시장 정책	적극	• 노동력의 고용기회 증대 • 정보, 상담, 알선, 숙련, 교육 등이 주요한 수단
	소극	• 임금대체활동을 통해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생존 보장 • 실업급여 등과 같은 대체임금이 주요한 수단

(출처 : 임운택, 유럽의 청년실업정책¹⁸⁾, 66쪽 이하 재구성)

위와 같은 시책들은 대규모 재정적 투자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노동시장정책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내 고용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16) 임운택, 유럽의 청년실업정책: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9권 제3호, 2011.

17) 실업과 저고용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며, 직업의 숙련이 활용되고 그 숙련 수준이 가능성에 따라 발전되며, 일자리와 노동조직, 노동환경의 조건이 사람들의 수요에 조응할 때 완전한 고용으로 간주함(U. Engelen Kiefer, Beschäftigungspolitik, Köln, 1995).

18) 임운택, 유럽의 청년실업정책: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9권 제3호, 2011.

2)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1) 역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역대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해왔으며, 각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수반하고 있었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직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년실업문제는 여전히 경제적·사회적 위험요소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때때로 보여줬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가주도형 노동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역대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정책	예산(억)	지원인원(명)	사업내용	정부
청년실업 종합대책 (2003.9)	5,390	126,453	- 일자리제공 - 현장연수 - 직업훈련 - 해외연수 취업지원 - 인프라 확충	노무현 정부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5.1)	7,885	252,716	- 단기일자리제공 - 청년층직업훈련강화 -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총원 - 직장체험활성화 - 해외취업인턴활성화 - 청년취업인프라 확충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8.8)	-	-	-	이명박 정부
청년고용 추가대책 (2009.3)	13,240	397,198	- 청년인턴지원 - 직업훈련 - 단기일자리제공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 취약청년일자리지원 - 창업지원	

(2) 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가. 정책기조

2015년 7월 27일 정부는 3년 내 청년 20만명의 고용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만명 중 신규로 7만 5천명, 인턴·직업훈련으로 12만5천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규채용 7만 5천명 중 5만3천명은 고령자의 조기퇴직과 임금삭감으로 청년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교원명예퇴직확대(1만5천명), 임금피크제도입(3만8천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7천명), 해외취업(5천명), 포괄간호서비스(1만명) 등의 정책을 수립하였다.¹⁹⁾

〈표〉 역대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2014.1.1.)			• 직업능력개발 교육 • 취업애로층 청년 고용 지원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정원 3% 이상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 글로벌인재 육성 및 지원(해외봉사 및 해외 취업 알선) 등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2015.7.27.)	명예퇴직 은지방채 발행 청년고용 증대세제 언급	20만명 목표	• 교원명예퇴직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 시간선택제 등 공공부문 4만명 이상과 민간부문 2년간 16만명(상시고용 3만5천, 나머지는 인턴 확대나 직업 훈련)	

나. 시행고용정책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청년지원 프로그램 Guide Book」²⁰⁾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정책인 모두 128개이다. 각 관련부처에서 부처업무와 관련된 노동시책을 정립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정책은 그 성질에 따라 각 관할부처에 산재하여 편성되고 있다(부록.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27개, 교육부는 16개, 미래창조과학부 11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중소기업청 21개의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정책으로 아래 〈표 6〉 참조).

19)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관한 평가로 김유선, 청년 일자리 실태와 대책, 청년일자리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10, 49쪽 이하 참조.

20) 고용노동부, 청년지원프로그램 Guide Book, 2016.

〈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정책

순번	시행정책	순번	시행정책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15	일 학습병행제
2	취업성공패키지	16	대학창조일자리센터
3	내일배움카드제	17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4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18	취업지원관 서비스
5	청년취업인턴 사업	19	대학청년고용센터
6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20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7	청년취업아카데미	2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8	고용디딤돌프로그램	22	NCS 개발 사업 확대
9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23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종인력 양성
10	K-Move	24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11	중소기업 취업연수 사업	25	기업대학
12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26	산업단지 환경개선 패키지 지원 사업
1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7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4	취업사관학교		

(출처 : 청년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다.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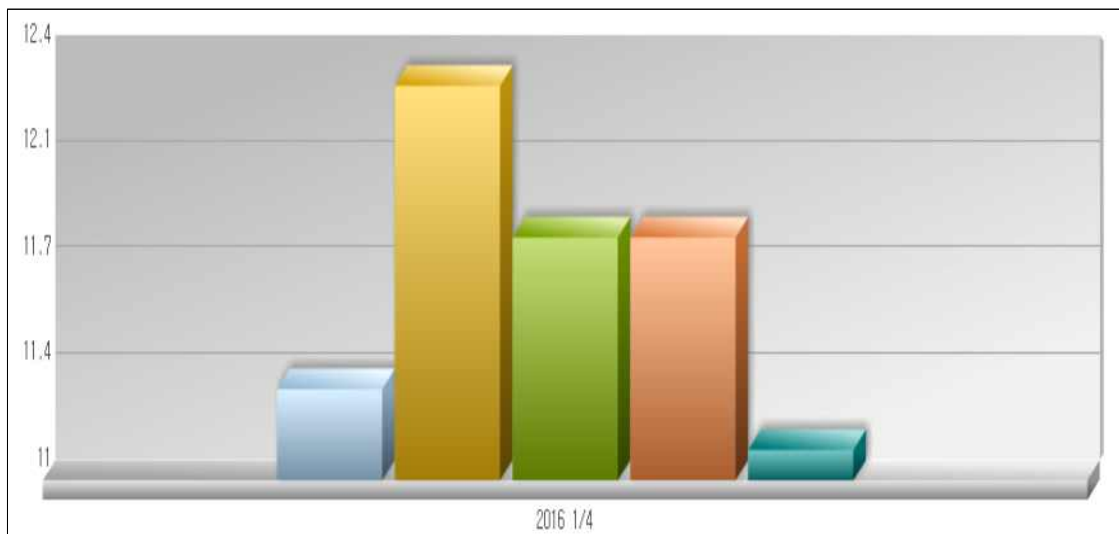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두 115개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각 지방단체는 정부의 고용정책을 지방에 특화된 채로 활용하기 위하여 또는 각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 중에 있다(〔부록 1〕 청년 일자리 정책 일람표 참조).

II. 수원시 청년실업

1. 수원시 청년 실업 실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고도화 추이는 각 지역별 청년실업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1.3%로 나타났으며,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의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서울시 12.3%, 부산광역시 11.8%, 대구광역시 13.5%, 인천광역시 11.8%, 광주광역시 9.1%, 대전광역시 9.6%, 울산광역시 12.2%, 경기도 11.1%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청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원시에 한정된 청년실업률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경기도 청년실업률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서울특별시나 몇몇 광역자치단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1%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주요 광역자치단체 지역별 청년실업률



주) ■ : 전체청년실업률 ■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²¹⁾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선분야로 수원시 청년은 일자리 발굴사업의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기업지원 분야를 일자리 창출 우선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수원시,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5.

〈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정책

구분	일자리 창출 우선 분야						
	취업알선	창업 등 지원	일자리 발굴사업	직업훈련	기업 지원	가사부담	기타
15-19세	27.7	14.0	30.3	14.5	11.8	1.8	0.0
20-29세	24.7	17.2	29.8	12.4	12.0	3.3	0.7

(출처 :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자료 재구성)

2. 경기도 청년실업 정책

경기도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 22개의 정책을 개발·시행 중에 있다. 경기도 청년실업 정책은 크게 취업·지원알선, 교육, 창업, 금융 및 문화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표〉 경기도 청년실업 정책

구분	정책
취업·지원·알선	경기 청년뉴딜
	고졸취업 활성화 사업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해양레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사업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 지원 사업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
	경기도일자리창출 특별협약 보증 지원 사업
인력양성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창업지원	예비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젝트
	경기북부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사업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 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
금융	굿모닝론
	슈퍼맨펀드
문화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청년문화창작소

(출처 : 청년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III. 지방자치단체 청년실업 정책

1. 서울시

서울시는 이행불가세대의 일자리·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서울의 청년취업자 수는 연평균 2.7% 감소하였고, 청년실업률은 10.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울시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서울시의 청년고용문제의 특징은 낮은 고용률과 높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난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및 노동 문제의 핵심사안을 유령실업자, 실망실업자, 일하는 빈곤층, 끊어진 일자리 사다리, 비진학 고졸취업 사각지대로 구분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표 9〉 참조).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및 노동정책은 단순취업·창업지원을 넘어 일자리 진입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도가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육성-직업능력개발-고용서비스’로 이어지는 각 사업부문 간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인다.

〈표〉 서울시 주요 청년실업 정책

◆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 목적	• 서울에 집적된 우수 기관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창의인재 양성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대학생 이상의 취업 대상자
• 내용	• 서울크리에이티브랩 • 창조아카데미 운영 • 캠퍼스 CEO 육성 • 미래형 신직업군 창출 • 서울커뮤니티크리에이터 양성 • 청소년 생각배움
◆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목적	•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에게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가 양성 및 혁신형 창업기업 창출
• 대상	• 20~30대 (예비)청년창업자
• 내용	• 창업공간, 교육·컨설팅, 자금, 투자, 유통·마케팅 지원 • 창업 이행단계별 선발 및 맞춤형 지원 • 창업회원제 3,000여명 모집·지원 → 성공가능 창업자 500팀 선발(3개월간 지원) → 우수창업가 250팀(1년간 지원)
◆ 서울 앱비즈니스센터	
• 목적	•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모바일 앱산업이 IT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앱 개발자 양성과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 대상	• 앱 관련 창업준비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
• 내용	• 6개월 간 입주개발실, 테스트베드, 교육장 제공
◆ 서울 게임콘텐츠센터	
• 목적	• 유망중소게임 기업에 대한 인프라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고 서울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대상	• 서울 소재 소규모(2~30인 이하) 게임관련 콘텐츠제작기업
• 내용	• 2년(1년 연장가능), 임대료, 임대보증금, 공용공간 관리비 지원 • 게임제작지원, 교육강좌 및 비즈니스 미팅, 소프트웨어 및 마케팅 대행, 법률서비스 등
◆ 청년허브	

• 목적	• 청년고용, 직업에 대하여 연구 및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 대상	• 서울시 청년
• 내용	•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 • 청년정책 연구 및 문제해결 혁신사례 발굴·혁신 • 국내·외 청년활동 협력망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

(출처 : 청년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2.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12대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영역에서 ‘도심형 청년창업 콤플렉스 조성’과 ‘생애최초 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 ‘사회적 경제 일자리형 공공근로제’, ‘부산이전기업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표 10〉 참조). 부산시 청년실업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군·직능별 개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 대상자도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정책별 긴밀한 협조체계는 부족해 보인다. 청년정책은 각 소관부서의 추진과제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포괄적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아쉬워 보인다.

〈표〉 부산광역시 주요 청년실업 정책

◆ 제5단계 BB(Brain Busan) 21 사업	
• 목적	• 산학협력을 통한 R&D 능력제고 및 대학·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 지역출신 석·박사 등 고급연구인력 양성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산업육성 도모
• 대상	• 부산대 등 13개 대학 20개 사업단 • 시비의 20%이상 대응자금 매칭, 전체금액의 70%이상 장학금 지원
• 내용	• 석·박사 등 장학금 지원, 전략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 • 월 지급액 : 박사 70만원, 석사 50만원, 학사 30만원 • '13. 6. ~ '17. 12.(5년) • 미래형 신직업군 창출 • 서울커뮤니티크리에이터 양성 • 청소년 생각배움
◆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목적	•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육성 및 재도약을 위한 신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
• 대상	• (현장인력) 신발업체 재직자 • (예비인력) 경남정보대학교 신발패션산업과 재학생
• 내용	• 건강 및 기능성신발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 맞춤 교육 • (현장인력) 의료용 맞춤형 교육, 기업 방문형 통합교육, 현장 실무자 역량 교육 • (예비인력) 현장실무 신발제작 교육, 업체 방문 현장교육, 신발품질평가사 교육

◆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 목적	• 청년층에게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능력 향상
• 대상	• (1·3분기) 근로장학생(비예산) • (2·4분기) 만29세이하 고졸이상 5년 이내 졸업자중 미취업 청년
• 내용	• 1인 월 120만원정도(일급 48,800원)

◆ 부산영상아카데미

• 목적	• 입체영상 및 콘텐츠 실무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 및 청년 취업지원
• 대상	• 지역내 교육과정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내용	• 실무능력향상 교육 3개 과정 : 5일 • 취업지원 위탁교육 2개 과정 : 4개월 • 기업 고용지원 사업 : 고용보조금 지원

◆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목적	• 지역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대상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자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자 • 예비창업자 또는 2015.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 MICE / ICT / 제조 / 전문서비스 등의 분야

• 내용	• 사무공간 지원, 창업교육 및 전문가 창업컨설팅 • 사업화자금 및 정책융자지원(창업특례자금), 네트워킹 지원 등 • 판로개척지원(전시회 참가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웹메거진 제작 배포 등)
◆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 목적	• 부산지역 전략산업 필요인력에 대해 지역대학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층 실업난 해소
• 대상	• 매년 공모 후 선정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중 미 취업자
• 내용	• 미취업자 대상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대상 학교는 공모 후 선정) • 과정 당 25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통해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공급
◆ 센터맞춤형 콘텐츠전문인력 양성사업	
• 목적	• 장애인, 고졸자, 게임과몰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 대상	• 고졸자, 장애인, 게임과몰입자 등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중 미 취업자
• 내용	• 게임디자인·게임유니티 과정 : 620H • 장애인(홈페이지 제작·관리 및 전자출판 디자인)과정 : 430H • 참여자 훈련수당 지급
◆ 에너지 분야 기초인력양성사업	
• 목적	• 지역내 에너지기업에 산학연관협의 네트워크체제를 강화하고 에너지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현장실무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현장견학, 현장실습, 산업체 인사특강 등 실무능력과 인성교육을 통해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
• 대상	• 기계계열 및 신재생전기계열의 재학생 중 에너지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전문기술인증을 부여
• 내용	• 지자체에서 주요 실습기자재 지원(매년 1,000만원)
◆ 미음 풍력부품산업 협동화 단지 조성 사업	

• 목적	• 세계적으로 급신장하고 있는 풍력발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풍력 부품전용 산업단지 내 전문기업 이전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대상	- 수행기관 : 부산풍력부품산업협동조합 - 풍력·기계부품 업체 - 역외기업 및 역내기업 이전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 내용	(역외기업 이전) 1개 업체(스틸코리아,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임직원 70명) (역내기업 확장이전) 10개 부품업체(신규채용 70명)
◆ 부산 모바일앱센터	
• 목적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창업 활동 지원 - 클라우드 시스템 및 테스트베드(가상실험) 제공 등 모바일 앱 개발 환경 지원 - 모바일 앱 개발 전문교육 실시 및 창업 활성화 교육
• 대상	•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모바일 앱 분야 예비창업자 (개발자, 기업, 학생 등)
• 내용	- 모바일앱 개발 전문인력 양성 - 모바일앱 창업 멘토링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 모바일앱 개발환경 무상 지원 및 모바일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부산 게임아카데미	
• 목적	• 게임제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및 인적 인프라 조성 기여
• 대상	• 관련학과 졸업자중 미취업자
• 내용	3D게임 프로그래밍 및 그래픽 과정 : 1,960시간 - 모바일게임 프로그래밍 및 그래픽 과정 : 2개월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 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체 우수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용접, 선급용접 자격증 취득 지원 - 조선기자재 특성화고의 기능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및 취업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대상	- 전기 및 특수용접 자격반 구성 운영 - 조선기계과 학생 1,2,3학년 학생 중 희망자 50명 - 선급용접반 구성운영 : 조선기계과 3학년생 20명
내용	- 용접 자격증 취득, 동아리반 운영 지원 및 취업지원 - 강사 운영, 실습 재료비, 기자재 수리보수 등

◆ 풍력발전 고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고급과정 운영

목적	에너지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인력 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
내용	-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과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연계하여 수행하는 에너지 분야 과정 운영 - 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남권 지역의 풍력기술 연구개발 핵심 기술인력 양성

◆ 부산시립미술관 청년인턴사업

목적	미술관 전문직 취업희망자에게 미술관 업무의 실무경험과 현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
대상	국내·외 미술 관련학과 등 4년제 대학 졸업자
내용	- 전시·교육기획 및 추진 - 작품 및 미술자료 수집, 조사, 연구, 관리, 상설전시 기획 및 추진 - 실무전시·교육기획 및 추진

◆ 벅스코 부산 홍보관 안내요원 채용 사업

목적	벅스코 내 위치한 '부산홍보관'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람객 안내 및 부산 시정 홍보를 위한 부산 홍보관 안내요원 운영
대상	- 초대졸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PC 능숙자(MS OFFICE/한글 등) - 외국어(영어) 가능자 및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내용	벅스코 내 부산홍보관 및 벅스코 방문객 안내 및 문의응대, 관련 행정 업무 보조 수행

	채용 시부터 ~ '16. 12. 31까지(운영방침에 따라 최대 2년 이내)
◆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원사업	
목적	- 부산지역 영재 조기 발굴·지원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인 과학 영재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전략산업분야 우수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대상	특수목적고(4개교), 특성화고(36개교), 마이스터고(3개교)
내용	(특목고 지원) 심화기자재 구입, 청소년 소논문 프로그램 지원, 국제전문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 지원) 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 : 영상, 신발, 항만분야 특성화 교육 및 실습 체계 구축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기업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 운영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운영 - 특성화고 자질함양 프로그램 : 유관기관 연계교육,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마이스터고 지원) 교육활동(동아리)운영, 방과후 수업, 산학협력활동
◆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목적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인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청년예술가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문화 육성
대상	부산 거주 만35세 이하 청년예술인(개인 또는 단체)
내용	-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창작활동지원,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 등) -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전문인력 인큐베이팅, 아카데미 등 운영)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청년문화 박람회, 젊은 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등) -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육성(자생적 청년문화공간 육성, 아트 프리마켓 활성화)
◆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목적	지역대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대상	부산지역 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교 10개 대학교
내용	대학별 공모·심사를 통하여 지원(1개 대학 3천만원 내외)

	기업이 원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 및 취업마스터플랜형 등 일자리 미스 매치 완화 및 대학생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 사업비
◆ 청년 취업역량 향상사업	
목적	-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잡 매치를 지원하는 토털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년의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 산·학·관 공조체제를 통한 청년취업의 미스매치 해소
대상	부산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내용	진단(직업적성 및 직업동기) - 탐색(직업세계) - 설계(자신의 진로)
◆ 부산지역 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사업	
목적	-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를 통한 지역 고용창출 잠재력 강화 - 지역 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도모
대상	(기업) 부산지역 소재 강소기업(제조업 중심) (청년) 부산지역 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자
내용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선정, 고용분야 중점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력 강화 - 지역 우수 강소기업(450여개) 방문, 지역 대학생이 요구하는 인사·복지·채용 정보 등 고용관련 복합정보 조사·제공 - 지역 강소기업 방문, 경영체험 및 체험수기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기업체험단 운영(35개 기업, 125명)
◆ 해상풍력 고출력 발전기 핵심기술 고급인력 양성사업	
목적	해상풍력 고출력 발전기 R&D 분야를 선도할 현장 맞춤형 석·박사 고급전문인력 양성
대상	석·박사 고급전문인력
내용	- R&D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 R&D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산학 종합 네트워크 구축 및 고출력 발전기 기술 개발

(출처 : 청년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IV. 수원형 청년실업 대응 정책 정립

1. 수원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초 및 방향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원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초는 수원청년의 가치 있는 경제적 삶 영위를 위한 취업 생태계 조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정부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나름의 고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국가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그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의 성질상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고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은 100여개를 훌쩍 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부처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부록 1〕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정책 역시 100여개를 훌쩍 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나아가 지자체 내부의 소관부서들에 산재해 있는 형국이다(〔부록 1〕 참조).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막대한 자금투입을 통한 청년실업률의 일시적인 하락효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자칫 청년실업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자원을 낭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는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다층적 문제이며, 이를 특별한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요란한 전시성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의 삶의 언저리에서 계속적인 조력자로 동행하고 같이 성장하는 보다 감성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앙행정기관보다는 보다 청년과 곁을 맞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인문학적 감성을 중요시하는 수원시의 정책기조와도 부합해 보인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제언은 동반형·성장형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기구로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의 구성 및 그 임무에 관한 것이다.

2. 수원시 청년 일자리 원탁회의(가칭) - 수원시 청년일자리 정책수립 및 시행 통합 컨트롤 타워

1) 목적

수원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수원시 청년일자리 통합 컨트롤 타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율함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상시적인 이행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을 통하여 성장·발전형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언되는 모든 정책기초는 다자간협의체에서의 진지하고 성숙된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밝힌다.

2) 구성

수원 청년일자리 통합컨트롤타워는 실업과 고용의 당사자인 청년과 산업체 및 고용주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성을 가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표〉 청년일자리 통합컨트롤 타워 구성



3)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의 기능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의 임무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체계구축, 정책수립, 정책이행 수준 모니터링, 수정노선 제시와 정책변경 등으로 나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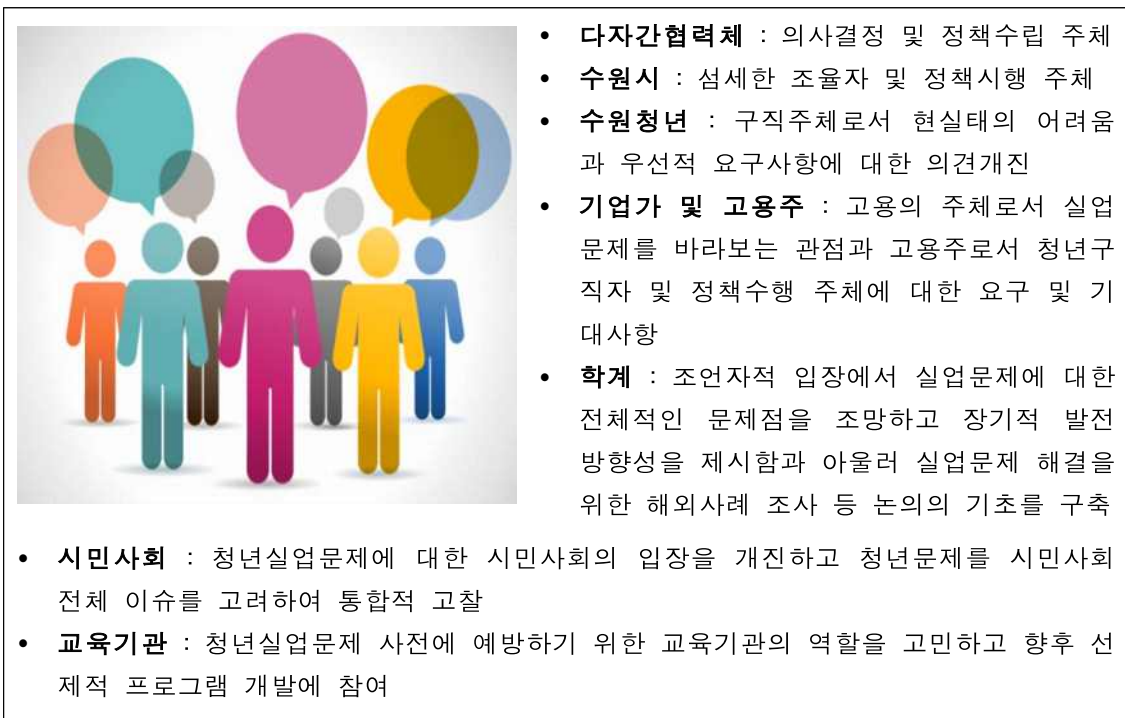
① 소통

-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수평적 위치에서 활발한 토의는 맞춤형 정

책개발의 필수불가결한 단계임

- 각 주체들의 이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청년실업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각 이해주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원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회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원시 청년특성, 수원시 청년의 고민, 수원시 소재 기업, 산업체 및 상업과 그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 현황 특성, 구인활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및 기대사항 등
- 일회적 이벤트성 회의가 아닌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을 통하여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논의의 질과 양도 발전해야 할 것임
- 컨트롤타워는 수원시 지역 내 이해주체를 넘어서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로서 역할

〈그림〉 청년일자리 통합컨트롤 타워의 소통주체



② 정책수립

-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는 **다자간 토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 ⇒ **실행가능한 Master Plan 설정**
- Master Plan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 수립
- 맞춤형 정책수립 : 이해관계자들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된 수원특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 제시

- 청년, 산업계, 시민단체 및 학계 간의 활발한 논의로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대응
-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발굴
-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수원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 소극적 일자리 소개를 넘어 적극적 일자리 알선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 니트족과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거나 반복되는 취업실패로 좌절한 수원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청년 다시 일어섬 프로그램’ 개발

③ 이행수준의 점검과 탄력적 대응

-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동안 통합 컨트롤타워는 소관부서의 점검과 정기회의를 통하여 정책이행의 수준을 점검함
- 정책이행의 수준이 미달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협의를 통하여 이행의 노선을 수정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개선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취함 ⇒ **성장형 청년일자리 정책**

-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통합 컨트롤 타워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논의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수원시의 특성과 그 시대적 특성에 조응하는 정책적 대응을 실현함 ⇒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

수원 청년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핵심은 소통에 있다. 답답하게 꼬여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 외에는 찾을 수 없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국가주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미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은 시간을 달리고 있으며 청년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청년이 주어진 시간을 잘 달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보다 지근거리에서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과 또 그들을 둘러싸고 환경과의 상호 소통을 통하여 한 발 더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감성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청년 일자리 컨트롤 타워 안에서 세심한 조율자로서 서로 간의 소통을 북돋으며 그로부터 도출되는 해안을 강력한 정책 집행자로서 결과물로 바꾸면 될 것이다.

3. 수원시 맞춤형 취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

1) 목적

전국 단위로 구성된 취업 프로그램 기반 위에서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target educ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원 청년이 수원 지역 내 일자리를 얻게 함으로써 정주 의사를 고취하고 나아가 건강한 수원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책내용

① 수원시 지역 내 산업구조의 특성 파악 후 취업교육프로그램 개발

- 수원시 지역 내의 산업구조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유후 일자리 현황 및 인력수요구조 파악
-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수원 지역 내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이를 통하여 수원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완화

② 직무역량인증서 발급

- 체계화된 일자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취업희망 청년에게 해당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하는 직무능력을 갖추었다는 ‘수원시 직무역량인증서’ 발급
- 직무역량인증서는 고용주가 직무역량의 유무나 정도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화된 내용으로 구성함
- 직무역량인증서를 보유한 수원 청년에게 강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 알선
- 통합컨트롤타워에서 수원시 지역 내 기업체들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수원시 직무역량인증서를 취득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한 혜택 부여
- 수원시 직무역량인증서를 보유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취업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청년들 간의 소통의 창구 마련

4. 수원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1) 목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의 경제활동 의지를 바로 세우고 강화할 수 있는 개별화된 direct care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니트족과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거나 반복되는 취업실패로 좌절한 수원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정책내용

① 청년 미취업자의 유인

- 수원시가 청년 취업을 장려, 독력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미취업 수원 청년을 수원시 정책 범위 내로 유인하는 것임
- 수원시는 완비된 정책을 구비하는 한편 효과적 정책시행을 위하여 미취업 수원청년을 정책 범위 내로 유인하여, 정책시행이 수동적 자극으로 끝날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 무엇보다 먼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원시가 적어도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음
- 수원시는 선제적으로 수원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수원시 정책을 소개하고 장래 취업시기가 도래했을 때 수원시와의 협동을 통하여 취업의 험로를 헤쳐 나갈 수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수원시에 산재한 대학 캠퍼스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거나 수원시 주재 취업특강을 통하여 청년취업에 있어서 수원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취업박람회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도 필요한 것이지만 주기적이고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청년을 정책범위 내로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② 소극적 정보전달을 넘어선 적극적 일자리 알선정책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구인광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의 지원정보에서 알선이 차지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부분 청년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임
- 수원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앞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축적한 청년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원시 청년일자리 통합 컨트롤 타워에서 구축된 다자간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많은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원시의 적극적인 알선정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③ direct care 시스템 구축

- 수원시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를 찾는 구직 청년의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개별적 면담을 통해 청년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파악
- 개인별 구직카드를 작성하여 청년의 생활환경 및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취업 시도 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언
- 니트족 및 다수의 취업실패로 좌절한 청년에 대하여는 전문 직업상담사와의 ‘청년 다시 일어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독려

④ 청년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조치

-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소정의 생활비 지원
- M-Job(Mini-Job) 알선
 -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생계보장을 위하여 수원시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 알선
 - 특히 지역 영세상인들 중 인력이 필요한 곳에 수원시에서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M-Job을 알선하는 방법과 같이 영세상인과 실업 청년의 어려움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M-Job의 가장 효율적인 예는 현재 청년이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동일 직능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으로(일-교육의 병행), 이 경우에도 수원시에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등의 지원금 보조

5. 청년 첫 일자리 지원 강화

1) 목적

수원 청년에게 양질의 ‘첫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에게 스스로 가치 있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원지역 내에서의 정주의지를 고취하는 한편,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으로 채용동인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한다.

2) 정책내용

- 지역 내 기업체 지원 : 첫 일자리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일정기간 지원금 지급 등 수원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방법 개발
- 첫 일자리 청년 지원 : 수원시가 시행하는 청년 프로그램 중 주거, 금융 및 문화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6. 경력단절여성 취업프로그램

1) 목적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통산 육아를 이유로 그 동안의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 아동이 성장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십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으로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경제사회로 편입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발생하는 재취업 기회 장애요인들을 탐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내용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에 앞서 청년일자리 컨트롤 타워에서는 수원시 경력단절여성의 수, 교육정도, 희망취업형태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일-가정-육아가 병행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며, 나아가 적극 알선할 필요성이 있음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과 선호를 direct care 시스템에서 파악하고, 수원시 산업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망직종과 수요를 예측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역시 청년일자리 컨트롤 타워를 정점으로 하는 수원시 청년일자리정책 수립·이행 안에서 이루어지며, 청년일자리 컨트롤 타워에서의 다자간 협의를 통한 일자리 방안에 따라 취업지원·교육 및 알선 등이 이루어짐

7. 비정규직 취업지원 프로그램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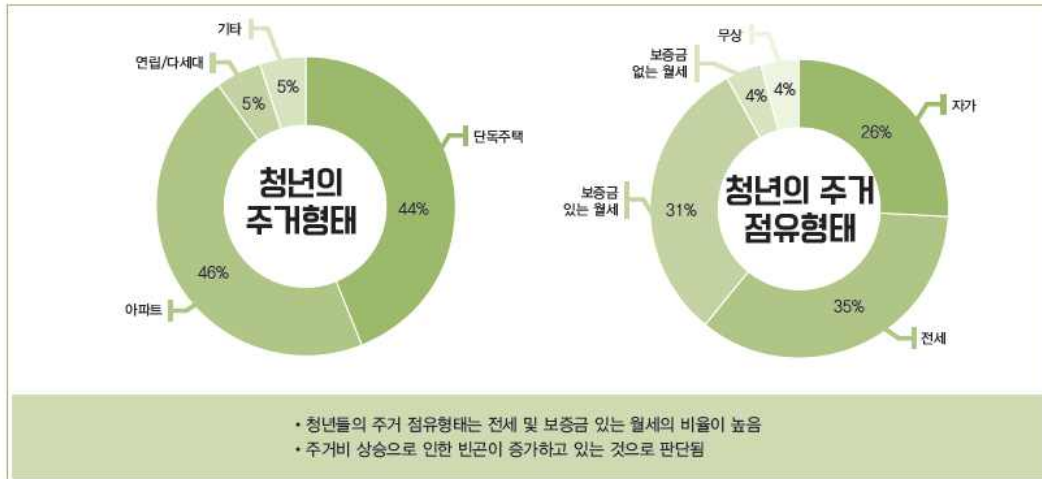
청년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지 오래이다. 그 중 ‘알바’라고 통칭되는 청년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의 문제로 청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당장 학비 내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청년은 ‘알바’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수원시 자체에서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적어도 수원시는 관내에서 ‘알바’로 생활비 내지는 학비를 충당하는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바’권리보장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2) 정책내용

- 청년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알바권리보장센터” 설치
- 노동 및 법률상담가 뿐 아니라 취업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단기간 노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수원시 취업프로그램으로 유인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창구로서 기능
- 센터 운영은 상임직원 뿐 아니라 관내 대학 또는 법조단체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다 민간주도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수원시 청년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안정적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수원시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독려
- 수원시 청년 비정규직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홍보물 등을 이용한 ‘알바 권리 안내서’를 배포
- 이와 아울러 청년 비정규직과 관계가 빈번한 고용주 교육 안내서를 이용하여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계몽교육 실시

비움 · 채움

생활안정(부채탕감) 및 청년 주거 자립성 강화



📍 민 · 관협력 「수원의宿」 장학관 사업

수원 출신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대상 기숙사 제공 + 기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청년안심 희망대출 수원시 보증인제 실시

소규모 대출시 수원시가 보증인으로 참여 + 협력은행 청년저축상품 개발 및 가입

탈빈곤을 통한 청년의 자립성 강화

제4장 비움채움, 청년주거 및 금융정책

I.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의 발생

1. 저성장기조에 따른 청년주거 문제의 발생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청년중심의 고용정책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지면서 청년층의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유동성, 저유가 지속, 경제침체 및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 채용규모의 감소 전망으로 인하여 청년 계층의 고용 불안 및 사회적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경제난은 사회와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세대는 경제력 감소, 교육기간의 증가, 취업난, 주택가격 부담, 만혼 등으로 인해 임차시장 거주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주거빈곤’²²⁾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서,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청년의 14.6%가 주거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빈곤과 최저주거기준

1) 주거빈곤의 의미

주거빈곤이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보다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²³⁾ 즉, 인간이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기준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은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주거빈곤으로 분류한다.²⁴⁾

최저주거빈곤에 미달한다는 것은 현재의 주거빈곤 상태가 개인 또는 가구단위 차원에서 극복하기 힘든 상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그리고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여건 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제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위협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22) 지하방 등 전전 청년 주거빈곤층 140만명… “한지붕 함께 살기가 돌파구”, 한국일보, 2015. 10. 27. 일자 기사, 기사링크 : <http://www.hankookilbo.com/v/812843d534bc4cebb017f51d7f8f6426> (최종검색일 : 2016. 04. 16.).

23) 김정은, 주거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8쪽.

24) 이현석,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보조제도의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98쪽.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 정책에서 청년은 사실상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²⁵⁾

주거빈곤은 사회적 배제로서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즉, 현재와 같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일차적 요인은 빈곤이며, 이로 인하여 교육·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차단, 인간망과 고용기회 단절 및 사회문화적 낙인 등으로 빈곤의 상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빈곤상황은 세대 간으로 대물림되어 주택계층화나 사회계급화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최저주거기준의 의의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거는 물리적 거주지로서의 주택과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포함한다.²⁶⁾

물리적 거주지로서의 주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확보된 주택으로 단순한 거처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각종 자연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하며, 쾌적한 생활을 위한 최소필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최저주거기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최소 1인 가구 기준으로 14㎡이다(국토해양부 「최저주거기준」 고시 제2조).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는 적절한 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을 영유하고, 부당한 사생활 침해나 강제퇴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주변의 사회적 연계망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주거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거의 최소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주거빈곤이라고 한다.

3. 청년층의 주거현황

1) 경기도 청년 현황

(1) 경기도 청년층의 인구현황

2015년 9월 기준 전국의 청년인구는 9,962,387명으로 2000년 11,636,748명에 비해 약 167

25)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③ 주거정책에 청년은 없다…‘맞춤형 임대’ 보급해야”, 한겨레, 2016. 01. 10. 일자 기사, 기사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5531.html (최종검색일 : 2016. 05. 02.).

26) 현명이, 장애인소득과 주거빈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4쪽 이하.

만 명이 감소하였다. 2000년 전국 인구 중 청년인구는 25.3%를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인구의 19.4%로 나타났다.

<표> 청년인구수 및 비율변화추이(2000~2015)

(단위: 명,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경기	2,099,315	23.5	2,199,998	21.3	2,322,342	20.7	2,462,800	19.7
전국	11,636,748	25.3	10,434,493	22.2	10,132,783	20.9	9,962,387	19.4

* 출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9월), 2015.

2015년 9월 기준 경기도 15~29세 청년인구는 2,462,8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19.7%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청년인구 구성비의 19.4%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청년인구는 2,462,800명으로 2000년에 비하여 약 36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인구 구성비율은 2000년 23.5%에서 2005년 21.3%, 2010년 20.4%, 2015년 19.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2) 경기도 청년층의 주거현황

오늘날에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렴한 주택의 감소로 청년계층의 주거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1인가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은 학업 및 구직기간의 연장, 결혼 유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20.2%에서 2014년 25.4%로 4년간 5.2%가 증가하였다.

<표> 경기도 전체 1인 가구의 비율

	전체 1인 가구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기	17.2%	17.2%	21.6%	21.5%	22.2%
전국	20.2%	20.3%	25.3%	25.3%	25.4%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연도

특히, 청년층(15세~29세) 가구주 중 1인 가구 비율은 2014년에 약 62%로 이는 전체 1인 가구 대비 3배에 해당되는 비율로 나타났다.

<표> 청년(15세~29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기	83.3%	86.5%	54.1%	61.7%	62.0%
전국	74.6%	79.4%	71.4%	80.8%	80.0%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연도

경기도 내 청년층의 거주는 약 58% 이상이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상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거주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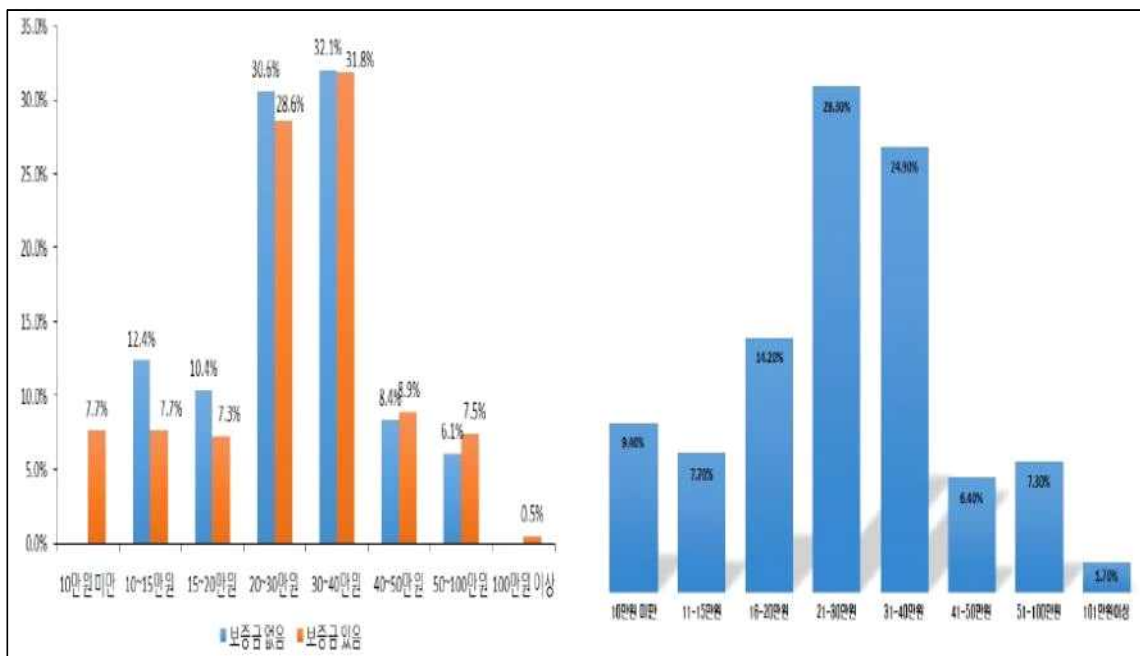
<표> 경기도 청년층의 거주실태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비중	41.5	33.3	9.3	2.8	13.1

*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실태조사(2014)

청년층(15세~29세) 가구주 가구의 주택관리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약 55%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4) Raw Data 분석에 의하면, 월세평균 보증금은 889만원, 월 임대료는 35.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20만원~40만원 월세납부액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청년계층 주거비용 분포(좌:인구주택총조사, 우:주거실태조사)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4)

청년가구주의 월세점유율은 2014년 기준 51.2%로 나타났으며, 생활비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 수준, 높은 주거비, 주거의 불안정 등의 문제는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 및 자립의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청년 가구의 월세 점유율(2014년 기준)

연령대별	경기도	서울	전국
15~29세	51.2%	70.1%	64.7%
19~34세	37.5%	52.2%	45.8%
15~34세	37.5%	52.5%	46.0%
전체	23.1%	26.3%	23.9%

*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4)

청년층의 경제적 문제는 주거, 생활, 부채 등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급여수준의 질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거 및 생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는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의 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만 제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주거문제와는 달리 2016년 국가 경제성장률 3% 내외, 2016년 경기도 GRDP 성장률 3.7% 내외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 및 월세 등 주거비용의 경우 2015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⁷⁾ 이에 청년의 주거문제는 현시점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원시 청년층 현황

(1) 수원시 청년층의 인구현황

수원시의 청년인구 분포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남성은 238,989명, 여성은 221,835명 총 460,733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여성인구에 비하여 남성인구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청년인구는 부산시의 청년인구(약119만명)나 서울시의 청년인구(약250만명)에 비하여 청년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원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의 청년인구 구성비인 25.43%와 경기도의 청년인구 구성비인 23.30%비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7)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2015, 22쪽.

<표> 수원시 청년인구 현황

연령별	계(명)	구성비(%)	성별	
			남	여
전체인구	1,188,841	100.0	238,898	221,835
15~19세	80,358	6.8	41,978	38,380
20~24세	93,882	7.9	48,907	44,975
25~29세	86,889	7.3	45,795	41,094
30~34세	96,913	8.2	49,759	47,154
35~39세	102,691	8.6	52,459	50,232

* 수원시청 수원통계(<http://stat.suwon.go.kr/stat/stat/populationFiveAgeList.do>, 최근검색일 : 2016. 05. 20.) 참고.

(2) 수원시 청년층의 주거현황

수원시 청년층의 주거점유형태는 15세~19세 및 20~29세 청년층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의 점유형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30~39세 청년층의 경우, 자가 및 전세의 점유형태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세~39세의 수원 청년 주거형태는 90%가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점유형태는 25.5%가 자가소유인 반면, 전세 35%, 월세 34.9%로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2015년 수원시 주택유형, 주택만족도 및 점유형태

구분		주택유형, 주택만족도 및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만족도					점유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연령별	15 ~ 19세	52.2	0.0	25.7	22.1	0.0	50.6	49.4	0.0	0.0	0.0	25.7	52.2	22.1	0.0
	20 ~ 29세	67.9	19.2	5.8	7.2	1.6	19.1	65	13.3	0.9	10.8	32.5	45.4	6.3	5.0
	30 ~ 39세	23.7	69.1	5.1	2.1	9.9	31.6	47.5	9.7	1.3	40.5	37.5	16.6	1.5	3.9

* 출처 :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참고.

수원시의 거주지 만족도는 약간만족(33.4%), 매우만족(14.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약간불만족(10.5%)한다는 응답보다 대체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주거시설 열악(31.4%), 주차시설부족(24.8%), 치안방법불안(1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현 거주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구분		현 거주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현 거주지 만족도					불만족한 주된 이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교육 환경 열악	교통 불편	주거 시설 열악	편의 시설 부족	주차 시설 부족	치안 방법 불안	기타
2015	계	14.2	33.4	39.6	10.6	2.2	3.4	7.3	31.4	10.7	24.8	16.4	6.1
주택형태별	단독주택	7.8	25.9	46.6	15.7	4.0	3.0	5.0	27.4	8	27.8	26.8	2.0
	아파트	18.6	39.5	35.7	5.5	0.8	6.7	10.3	28.8	21.9	16.9	5.0	10.3
	연립주택 /다세대	11.9	26.9	34.2	22.6	4.4	0.0	10.4	37.8	2.8	29.6	8	11.4
	기타	4.0	9.9	64.3	18.5	3.3	0.0	0.0	81.7	0.0	18.3	0.0	0.0
점유형태별	자기집	21.1	37.6	30.6	9.3	1.4	5.5	9.7	20.9	13	28.9	16.4	5.6
	전세	9	33.5	44.7	9.9	2.9	2.0	4.3	39.9	11.1	19.8	7.1	15.8
	보증금있는월세	4.5	25.9	52.2	14	3.4	1.7	7.1	37.5	5.1	26	22.5	0.0
	보증금없는월세	0.0	4.8	80.6	14.6	0.0	0.0	0.0	100	0.0	0.0	0.0	0.0
	무상	7.1	21.9	56.9	12	2.2	0.0	0.0	31.8	33.7	0.0	34.5	0.0

* 출처 :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참고.

가구의 주된 소득원인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친인척 보조금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에 수입원을 의존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가구의 주된 소득원

(단위:%)

구 분		가구의 주된 소득원							
		가구주의 근로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 소득	공적·사 적연금 및 퇴직금	정부보조 금	종교 또는 복지단체 보조금	친인척 보조금	기 타
2015	계	73.6	6.3	4.6	6.1	3.1	0.1	6.2	0.1
주택 형태별	단독주택	64.6	5.4	7.8	4.7	5.0	0.0	12.6	0.0
	아파트	79.5	6.4	3.1	6.8	1.6	0.1	2.4	0.1
	연립주택	67.6	9.8	1.3	6.9	7.0	0.0	7.5	0.0
	/다세대								
	기타	78.2	4.0	9.9	4.0	0.0	0.0	4.0	0.0
점유 형태별	자기집	74.6	6.1	6.0	8.8	0.8	0.1	3.5	0.1
	전세	75.9	7.8	3.4	3.4	2.9	0.0	6.6	0.0
	보증금 있는 월세	65.7	5.9	2.9	3.5	9.4	0.0	12.7	0.0
	보증금 없는 월세	94.6	0.0	0.0	0.0	5.4	0.0	0.0	0.0
	무상	88.3	4.7	2.3	0.0	0.0	0.0	4.8	0.0

* 출처 :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참고.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19.4%), 200만원~300만원 미만(17.6%), 300만원~400만원 미만(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구 분		가구의 주된 소득원 및 월평균 가구 총소득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 만원 미만	100 ~ 200만원 미만	200 ~ 300만원 미만	300 ~ 400만원 미만	400 ~ 500만원 미만	500 ~ 600만원 미만	600 ~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2015	계	14.8	19.4	17.8	17.6	12.6	7.6	4.6	5.5
주택 형태별	단독주택	25.2	29.7	21.2	14.1	4.8	2.1	2.1	0.8
	아파트	7.1	11.2	15.2	21.1	17.7	11.9	6.7	9.0
	연립주택/다세 대	24.1	29.5	21.0	10.8	10.9	1.5	1.5	0.7
	기타	24.4	44.1	24.2	0.0	0.0	3.3	0.0	4.0
점유 형태별	자기집	10.1	13.2	16.1	20.0	16.7	11.2	5.4	7.4
	전세	12.9	17.8	22.2	18.7	9.8	6.0	6.6	6.0
	보증금 있는 월세	28.8	35.0	15.8	10.3	5.7	1.5	1.5	1.4
	보증금 없는 월세	15.0	54.3	30.6	0.0	0.0	0.0	0.0	0.0
	무상	12.1	16.8	25.8	26.4	16.6	2.3	0.0	0.0

* 출처 :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참고.

또한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은 교육비와 주거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증금 있는 월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 특히 주거비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이라고 응답한 응답률은 7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에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가구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단위:%)

구분		가구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 의료비	의류비	교통 통신비	기타	부담스러 운 지출 없음
2015	계	18.3	26.2	26.3	13.8	1.5	4.6	1.4	7.9
주택형태 별	단독주택	19.7	34.0	13.7	17.9	2.4	3.9	1.0	7.5
	아파트	18.0	21.5	36.1	10.0	0.8	4.5	1.3	7.9
	연립주택 /다세대	17.9	18.6	15.1	25.3	3.0	7.2	3.7	9.2
	기타	6.6	75.6	0.0	0.0	0.0	9.9	0.0	8.0
점유형태 별	자기집	17.0	16.1	31.8	16.6	0.8	5.4	1.9	10.2
	전세	22.0	24.6	24.6	11.5	2.9	4.9	0.8	8.6
	보증금 있는 월세	15.4	53.3	14.2	9.4	1.9	2.1	0.9	2.7
	보증금 없는 월세	10.4	74.3	0.0	10.4	0.0	4.8	0.0	0.0
	무상	40.2	2.3	38.0	11.9	0.0	7.5	0.0	0.0
혼인상태 별	미혼	24.7	39.9	12.9	3.3	4.1	6.3	0.6	8.2
	배우자있음	17.9	23.0	32.7	12.1	1.1	4.8	1.0	7.5
	사별	14.8	24.8	6.2	35.9	0.0	1.4	3.6	13.3
	이혼	16.3	31.9	17.8	19.1	2.1	4.4	3.2	5.1

* 출처 :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참고.

부채의 유무 및 원인에 대한 응답은 가구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52.8%로 나타났다. 가구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채원인은 ‘주택임차 및 구입(64.9%)’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빚곤란 증가와 주거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부채의 유무 및 원인

구분		부채의 유무 및 원인							
		부채 있다	부채의 원인						
			주택 임차 및 구입	교육비(자 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	재테크 투자	사업/영농 자금	기타
2015	계	52.8	64.9	7.9	2.0	9.0	4.5	10.3	1.4
주택 형태별	단독주택	41.0	48.4	10.8	3.3	16.6	3.1	16.6	1.2
	아파트	59.8	72.3	7.0	1.3	6.0	5.3	7.2	0.9
	연립주택/다 세대	49.9	63.1	8.5	4.5	9.0	0.0	10.4	4.5
	기타	57.3	39.0	0.0	0.0	5.7	17.2	31.1	7.0
점유 형태별	자기집	56.6	74.8	6.4	1.9	4.6	3.4	8.1	0.9
	전세	51.4	69.2	8.0	1.6	7.4	4.9	8.8	0.0
	보증금있는월 세	44.2	37.6	12.6	2.7	19.7	6.2	16.9	4.4
	보증금없는월 세	40.1	37.0	0.0	13.5	0.0	12.0	37.5	0.0
	무상	61.3	15.3	11.8	0.0	42.4	11.3	15.3	3.8
혼인 상태별	미혼	37.0	48.0	16.6	0.0	21.4	5.2	6.1	2.7
	배우자있음	60.3	69.8	6.3	2.0	6.4	4.9	9.9	0.8
	사별	26.0	50.6	5.2	5.5	8.5	6.2	15.9	8.0
	이혼	45.8	44.9	15.4	2.8	19.7	0.0	15.5	1.7

* 출처 :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참고.

4.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과 평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

핵심주제	관련 대책
시장정상화	○ `13.4.1. 대책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li> <li>- `13.7.24. 대책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 - `13.12.3. 대책(4.1. 대책 후속조치 계획) : 공유형 모기지 확대, 행복주택 활성화</li> <li>○ `14.7.24. 대책 :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LTV, DTI 규제완화) ○ `14.9.1. 대책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
서 민 주 거 안 정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	○ `14.2.26. 대책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 `14.3.5. 대책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 `15.1.13. 대책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서민주거안정	○ `13.8.28. 대책 :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 `13.12.3. 대책(8.28. 대책 후속조치계획) : 공유형 모기지 확대, 행복주택 활성화 ○ `14. 10.30. 대책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 - `15.4.6. 방안(10.30. 대책 보완방안)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

* 출처 : 김현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2년 평가와 과제, 부동산포커스 2015년 7월호.

2012년 이후,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은 총 9번에 걸쳐서 발표되었는데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바,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책은 총5개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대책이 2개, ‘임대차시장 안정’ 대책이 3개로 나타났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경기적 요인과 부동산 지상의 구조변화에 따른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관련 대책 역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단기 대책과 ‘임대시장 선진화’라는 중장기 대책으로 세분화 된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총 2차례 정도 발표되었는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주택바우처 등의 주거복지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서 중·서민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이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강화’를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데, 중점적인 수혜대상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단신노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현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들의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²⁸⁾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²⁹⁾ 현재 공급량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101만호 정도인데, 이 정도의 공급량으로는 최저빈곤층에 대해 겨우 지원이 가능한 실정이다.

28) “청년 주거빈곤 해소 못하는 박근혜정부, 청년들이 대안을 제시하다”, 대학신문, 2014. 06. 01. 일자 기사, 기사링크 :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55> (최종검색일 : 2016. 04. 16.).

29)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월간복지동향 제196, 2015, 8쪽.

<표> 가구주 연령대별(16세~39세)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2012년)

(단위: 가구, %)

구분	전국		서울	
	수	비율	수	비율
16~20세	371	0.0	151	0.1
20~24세	4,532	0.5	554	0.3
25~29세	25,058	2.6	2,317	1.4
30~34세	86,568	9.1	7,242	4.3
34~39세	116,505	12.2	11,172	6.6
전체 (16~85세 이상)	952,590	100.0	168,438	100.0

*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2).

실제 2012년 청년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전체 대비 6% 정도이며, 20대 가구는 1.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층은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대상에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 해외 및 국내 타 지자체의 청년주거정책

1. 해외의 청년주거정책

1) 프랑스의 청년주거정책

(1) 세대 간 주택임대(Ensemble 3 Generations)

프랑스에서는 청년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독거노인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앙상블 2 제너레이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제도는 독거노인의 단절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두 세대 간의 교류를 장려하는 장치로서, 2006년 처음 도입되어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³⁰⁾

앙상블 2 제너레이션 제도는 세 가지 운영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방세없이 사는 조건으로 청년이 낮 시간은 자유롭게 생활하되, 저녁식사시간 전에 귀가해야 한다. 자유시간은 주 1회 저녁시간과 월 2회 주말(금~일요일)에 가질 수 있으며, 이 자유시간 외에도 3주 휴가를 갖는다. 둘째, 일정 금액의 방세를 내는 조건으로 낮 시간에 외출, 영화, 독서,

30) 이수옥 외 4인,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5, 221쪽.

컴퓨터 같은 간단한 서비스를 함께 거주하는 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월세로 매달 프랑스 지역은 월 80에서 100유로, 지방은 월50에서 90유로를 지불하도록 정해져 있다. 셋째, 노인에게 대한 최소한의 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감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파리의 경우, 월세로 대략 400에서 450유로를 지불함. 지방은 약250에서 350유로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파리시는 ‘양상블 2 제너레이션’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10년 4월 세대 간 공동주택 임대 현장을 채택하고, 현장에 조인한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협력 기관은 독거노인과 청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3년까지 성사된 공동거주자 계약이 약 1천 7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

(2) 그 외의 지원 프로그램

가.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

프랑스 파리시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2만 500호를 공급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2011년까지 총 1만 125호를 공급하였다. 1만 125호 중 청년 근로자를 위한 숙소가 약 4천호, 2014년까지 4천 7백호를 더 공급하고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11년 약 1천9백호에서 2014년까지 7천 8백호까지 증가하였다.

기존 주택의 리노베이션과 신규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2011년 9월까지 6천 2백호를 공급한바 있다.

나. 폴부르제(Pual Bourget)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폴부르제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은 파시시가 소유한 건물 관리회사가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면 현장에 조인한 기관이 가구를 비치한 뒤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세대 간 사회주택 프로그램

세대 간 사회주택 프로그램은 오래된 시 청사의 일부를 리노베이션하여 거동이 가능한 독거노인과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건물 1층에서 세대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세대 간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택공급기관은 1894년 법률제정으로 HBM(Affordable Housing)의 개념이 제도화되면서 주택공급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1950년 법률적으로 HLM(Moderate Rent

Housing)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1,000여개의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2003년에 도시재생 국가 프로젝트가 실시되면서 정부가 정책실행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제공하였다. 2011년 현재 주택재고는 3,250만호이며, 사회임대주택은 450만호가 존재하고 있다.

라. 공동임대 프로젝트

파리 13구의 푸행트 디브리 숙소는 청년근로자에게 아파트를 공동 임대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가구가 갖추어진 2~5개의 개별 방과 공동욕실, 주방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다.

파리 14구에서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개조하여 대학 및 학교활동 지역센터 파리지부가 선정한 6학생에게 공동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파트에는 가구가 비치된 개별 방이 4~5개 있다.

파리 20구에서는 도시취약지구 부근의 넓은 가족형 사회주택을 공동임대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 공적 보조를 받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집을 구하기에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근로자가 입주대상이다.

마. 대학 내 주거복지지원센터

프랑스 국립 대학후생센터인 크누스(le centre national des oeuvres universitaires et sociales, CNUOS)는 동등한 성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거주 대학생들에게 주거지원을 포함한 생활 및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 주택수당제도(Allocation de Logement, AL)

프랑스에서는 주택수당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주택보조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하다.³¹⁾ 이 제도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차등적 주거수당, 가족주택수당, 사회주택수당 등 세 가지 주택수당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택수당은 2010년 말 현재 610만 가구에 지급이 되었으며, 이 중 임차가구가 500만이고, 주택 소유가구가 60만, 호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50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택 수당은 개인주택수당과 가족주택수당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계층인 청년, 학생, 자녀가 없는 부부, 노인, 장애인 등을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주택수당은 1971년에 제정된 것으로, 거주형태·소득·거주지역·가구규모·대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매년 1월 1일마다 재산정한다.

31) 김경환 외 4인,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국토해양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 24쪽.

2) 청년층을 위한 독일의 대안적 주거

(1) 공동주거

독일의 공동주거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제도로써 공동주거는 비용이 매우 저렴한 주거방식으로 특히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상화되어 있다. 침실 개수가 함께 거주할 사람 수를 결정하며, 거실과 주방은 공동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초기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기숙사 형태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즈니스집단, 전문가 모임, 다세대 모임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2) 다세대 하우스

다세대 하우스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거의 한 형태이다. 한 집에 노인, 젊은 부부, 학생이 같이 거주하면서 주거공동체를 복원하고, 세대 간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6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5년 기한으로 진행되어 2012년에 종료되었다. 현재 두 번째 단계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450가구 정도의 다세대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

3) 스웨덴의 청년주거정책

(1) 스웨덴의 주거비 및 기숙사 지원제도

주거비 및 기숙사 지원제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18세~29세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둘째, 석사과정 학생대상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석사과정 학생들부터 주거비 전액을 지원해주는데, 2학기 동안은 주택이 제공되고, 한 학년 동안은 거주지에 위치한 기숙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4) 일본이 청년주거정책

(1)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는 하나의 주거공간을 다수가 공유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고시원, 기숙사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커뮤니티 개념을 담은 공유공간과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개인공간으로 구성된 주거형태이다. 셰어하우스는 개인공간은 확보되고, 그 외의 공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10여년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31곳의 695개 방에서 2007년에는 429곳 6897개 방으로 늘었고, 연 30%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보증금이 저렴하고, 기본적인 가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거주자 연령비율은 20대 후반이 29%, 30대 초반이 19%, 30대 후반이 9%로 주로 25~39세의 청년층이 전체 셰어하우스 거주자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 타 지자체의 청년주거정책

1) 부산의 청년주거정책

(1) 청년의 주거자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부산은 “청년의 주거자립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① 청년주거비 부담 경감, ② 청년들의 생활패턴에 맞춘 주거 지원, ③ 청년들의 주거안정으로 지역 정착 유도라는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추진목표를 위하여 ① 저렴한 청년주거공간을 공급하고, ② 생활패턴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며, ③ 주거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2) 구체적인 정책운영방안

위와 같은 세부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저렴한 청년 주거공간 공급’을 위하여 ① 대학가 생활아파트 제도, ② 세대협력형 룸셰어링 ‘DRIDA’ 제도, ③ 공·폐가 재건축택 ‘가치집’ 제도를 운영하고, ④ 주거빈곤 가이드라인 마련하였다.

둘째, ‘생활패턴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하여 ① 청년공동주거 지원 ‘함사세요’, ②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및 교육정책 ‘청년살이 지킴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주거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① 도심산업단지에 청년전용 주택 공급, ② 부산이주 청년 초기정착용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

(1) 기존 청년주거 정책 개요(2014년까지의 정책내용)

서울시는 2010년부터 희망하우징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희망하우징은 주로 매입한 다세대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에 평균 임대료는 수급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 전후에서 공급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사울소재 대학생으로서 부모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희망하우징은 2009년 말에 정책이 발표되어 2014년 10월까지 998호를 공급하였다.

2014년에는 정책대상을 청년 일반으로 확대한 첫 공공주택을 공급하였다. 서울시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을 공급하였고,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비진학 청년을 포함한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회초년생, 비진학청년으로 주거복지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청년들이 구성된 주택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등록되었고, 청년에 의한 사회주택이 공급되었다. 지불능력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자발적인 움직임과 십시일반으로 사회적 자원을 모아 공급한 사례로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의 새로운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 내용

구분	서울시	
	정책	내용
청년일반	- 원룸형 공공주택 일부 -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시세 30% 전후
대 학생	희망하우징	시세 20~30%
특징	직접공급위주 수량한정(원룸형 전체 2,000호, 협동조합형 32호, 희망하우징 1,000호 수준)	

(2) 2014년 이후의 서울시 청년 주거정책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시행된 청년의 주거문제를 진단하고, 청년을 ‘민달팽이세대’로 칭하면서 청년 주거정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사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의 상태를 ‘주거빈곤가구’와 ‘주거빈곤위험가구’로 분류하여 각각의 청년 특성에 맞는 청년 주거정책을 운영 중에 있다.

우선 ‘주거빈곤가구’의 정책대상은 ① 초열악 주택거주,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의 계층, ③ 저신용 계층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초열악 주택거주 계층에 속한 청년은 거주자 이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긴급지원방안을 마련기로 하였는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의 계층에 속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을 상향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이를 위하여 청년 특화 공공주택의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저신용 계층에 속한 청년들을 위하여 보증금 대출을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상향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주거빈곤위험가구’에 해당하는 정책 대상은 ① 소득 대비 주거비 과부담 계층, ② 주거 고립 위험 계층으로 구분하여 계층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대비 주거비 과부담 계층을 상대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사회주택 지원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주거 고립 위험 계층을 상대로 주거공동체 지원을 해주고자 협동조합형 주택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III. 수원형 청년주거정책 정립

1. 수원시 청년주거정책의 개요

청년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수원시 청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주거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원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책 목표를 “청년의 주거 자립성 강화”로 설정하였다. 청년의 주거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음으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청년층이 수원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청년생활 밀착형 주거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수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구체적인 수원형 청년주거정책 제언

1) 대학생 희망드림 하우스 정책

(1) 사업개요

대학생 희망드림 하우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건설한 수원시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원룸을 수원시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희망하우스’, 부산에서 운영 중인 ‘대학 생활아파트 제도’, 경기도 시공사 ‘따복희망마을’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2) 추진배경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생 원룸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중 72.2%가 ‘전·월세 비용이 부담된다’로 응답하였다. 월세 세입자들은 평균 1,418만원의 보증금과 평균 42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알미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율은 평균 15.52%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 1인가구는 청년층고 고령층으로 구분되어지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수원의 경우 1인 가구 전국 평균 23.9%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³²⁾ 이중 20~30대 청년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92,869명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³³⁾ 또한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가구의 약 51%는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7.1%는 100~200만원 미만의 수준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청년 및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률이 높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셰어하우스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원시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청년주택 보급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책목표

대학생 희망드림 하우스의 정책목표는 **대학생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32) 수원시 1인 가구 규모변화 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경기도	229,800	10.6%	337,555	12.6%	562,995	16.9%	777,360	20.3%
수원시	26,607	12.3%	40,667	14.3%	70,601	20.5%	92,869	24.8%

33)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연구, 2015, 15쪽.

(4) 세부내용

대학생 희망드림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주택을 모색하여야 하고, 수요조사 및 소유주와 협의 또한 필요하다. 임대주택이 확보가 되면 최소한의 리모델링 작업 후,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의 재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 희망드림 하우스 정책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도 필요하며, 희망드림 하우스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 기대효과

대학생 희망드림 하우스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인근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주택 공급, “수원형 따복마을 만들기”

(1) 사업개요

경기도가 현재 경기도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주거 복지사업인 따복 희망마을을 수원시에 유치하여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2) 추진배경

따복희망마을은 경기도에서 저소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주변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원룸형임주택으로 현재 안양시 만안구에 따복 희망마을 1호가 공급되어 2015년 7월부터 입주하였다. 경기도시공사는 향후 따복희망마을 2~4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수원시에 따복희망마을을 유치하여 경기도와 상생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정책목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목표가 있다.

(4) 세부내용

수원형 파복마을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원시 내에 파복마을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파복희망마을 건축 후, 수원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야 한다. 즉, 수원시의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시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는 만큼 마을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예산으로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원형 파복마을 만들기 정책을 수행한다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형태는 전세 및 보증부 월세로 하고, 단, 임대보증금은 기존 임대주택 보증금의 75% 이하로 임대료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의 수혜대상은 수원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이다. 또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기대효과

경기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렴한 전용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따로 또 같이, 청년을 위한 “Youth House”

(1) 사업개요

개인공간은 따로 사용하지만, 취사 및 휴식공간은 함께 이용하는 공동생활 주거공간인 셰어하우스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다.

(2) 추진배경

오늘날 청년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생 등 청년들의 1인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주거를 공유하면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거공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정책목표

1인 주거비 부담완화로 청년의 주거고민 해결

(4) 세부내용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확보하여 청년의 공유주거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임대아파트를 확보 및 보수하여, 청년 2~3인이 공유하고, 임차료는 1인당 15~19만원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이렇듯 3인 이상 청년들의 공동주거가 확인되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기세 등의 누진세를 감면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유주거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Pool을 구성하고, 그 Pool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청년들 간의 매칭을 해줄 수 있는 전담 기관을 두어 공유주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대효과

1인 주거비 부담완화로 청년의 주거고민을 해결 할 수 있다.

4)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한울타리”

(1) 사업개요

수원 지역 내의 공가 및 폐가나 유희시설을 활용 및 리모델링하여, 청년 사회주택 형태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2) 추진배경

2012~13년에 수원시 장안구·팔달구·권선구에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관내 폐가 및 공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공가 및 폐가가 가출 청소년 및 노숙자들에 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서수원 지역은 건

축 후, 20년 이상 된 낡은 고시원·여관·빈사무실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공가 및 폐가, 유희시설을 재정비 하여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정책목표

공가 및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 형태로 청년들에게 주거공간 공급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문제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표가 있다.

(4) 세부내용

공가 및 폐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청년 주거 맞춤형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가 및 폐가,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할 업체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업체와 협력하여 정비 후, 수원시 내에 거주하는 소득대비 주거비 과부담 계층에게 공급한다.

(5) 기대효과

공가 및 폐가를 리모델링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유주거공간을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청년 주거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센터, “주거공감” 운영

(1) 사업개요

향후 설립될 예정인 ‘청년지원센터’에 청년주거지원센터인 “주거공감”을 설치하여 주거정책을 청년들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진배경

현재 수원시에는 청년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거정책들을 추진할 때, 정책의 수혜대상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현재로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설립될 ‘(가칭) 청년드림프라자’에 청년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세부내용

청년주거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주거지원센터의 조직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청년주거지원센터에서 청년 임차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다양한 주거정책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기대효과

주거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청년주거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금자리 지킴이” 운영

(1) 사업개요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추진배경

부동산 임대인인 집주인과 청년임차인 사이에는 부동산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있어서도 간극이 심하다. 이에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청년들이 임대차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묵시갱신까지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세부내용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에게 전세 및 월세의 실거래 가격을 공시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청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교

육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에게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부동산 종합법률 및 사례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한다.

(4) 기대효과

청년 임차인 보호 및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7) 수원 이주 청년 초기정착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1) 사업개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원으로 이주하는 경우,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 추진배경

고용과 주거가 결합될 때, 인재 유인의 효과가 높다. 청년의 경우, 경제력 부족으로 인하여 전·월세 보증금의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전세 보증금 대출에 비하여 월세 보증금 소액대출은 그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이 어렵다.

이에 수원시에 첫 주민등록이전을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비용 명목으로 기초지자체 정책성 자금을 이용하여 수원시에 이주해 온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세부내용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원형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설치 필요하고, 전월세 보증금 지원 자격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에서 보증금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된 청년을 상대로 전월세보증금의 일부 지원하고, 금융권과 수원이 서로 협력하여 보증금대출 조건을 완화해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기대효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일자

리와 주거안정을 통하여 수원에 청년인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청년금융위기 개요

1. 사회구성원 진입을 위한 과도한 비용의 지출

과거에 비해 현재 청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직업 마련 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사회진출 전 이미 마이너스의 상태가 된다. 현재 70%가 넘는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대학등록금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제도로 이를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중 취업후상환학자금은 2010년 기준 8,456억 원에서 2014년 기준 16,38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상환학자금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출처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 가계부채의 증가와 청년의 삶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부채는 부채의 절대적인 크기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2013년 대비 30세 미만 청년이 11.2%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30~39세 청년들 또한 7% 늘어났다.

<표>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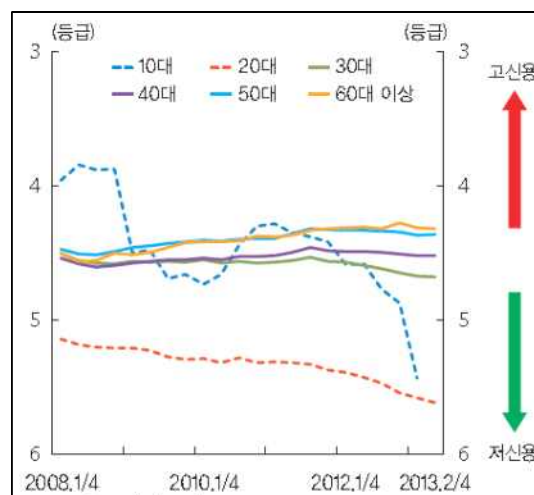
(단위: 만원, %, %p)

구분		평균		
		2013년	2014년	증감율
전체		5858	5994	2.3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1401	1558	11.2
	30~39세	4890	5235	7.0
	40~49세	6879	6824	-0.8
	50~59세	7959	7911	-0.6
	60세이상	4201	4372	4.1

※ 출처 : 통계청, 2014년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 조사

또한 청년부채의 질적 악화의 문제가 있다. 청년부채가 증가함에 따른 신용하락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연체율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상태가 떨어짐에 따라 제도권의 금융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림> 연령별 평균 신용등급



※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4년.

<표> 연령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단위 : 명, %)

구 분	'13년	'14년	증 감 (률)	누 계
29세 이하	6,098 (7.9)	6,671 (9.6)	573 [9.4]	166,123 (13.4)
30~39세	21,219 (27.4)	20,141 (28.9)	-1,078 [-5.1]	450,923 (36.4)
40~49세	26,101 (33.6)	22,936 (32.9)	-3,165 [-12.1]	393,015 (31.7)
50~59세	18,476 (23.9)	15,120 (21.7)	-3,356 [-18.2]	180,923 (14.6)
60세 이상	5,587 (7.2)	4,811 (6.9)	-776 [-13.9]	48,128 (3.9)
계	77,481(100.0)	69,679(100.0)	-7,802 [-10.1]	1,239,166(100.0)

※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주요통계(2014년)

3. 청년금융위기의 특징

청년금융위기의 특징으로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진입비용 (교육비용 등)의 증가, ② 주거비 증가를 비롯한 고비용 사회, ③ 낮은 취업률,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저소득층의 확대, ④ 건강보험 미가입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소외, ⑤ 신용사다리의 붕괴와 신용격차 발생, ⑥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의 지연 또는 포기로 나타나고 저소득, 고비용, 저신용 문제는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V. 국내 청년금융정책

1. 중앙정부의 정책

최근까지 정부는 대학생, 청년층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해 저리 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을 지원해 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대출 : 매년 약 70~80만명*
- * 국가장학금 지원규모(조원) : ('12년) 1.8, ('13) 2.8, ('14) 3.3
- * 한국장학재단 대출규모(조원) : ('12년) 2.3, ('13) 2.5, ('14) 2.4
- 서민금융 유관기관(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저리자금 및 신용회복을 지원('12년~)
-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신복위, '12.2월~)를 통해 대학생들의 연체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최대 50%까지 원금 감면)*
-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연체채권 약 5.9만건을 매입('14.10월)하여 채무조

정 지원

또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대학생 대상 신규 고금리대출을 감소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축은행 대학생대출 잔액(억원) : ('12말) 3,249 → ('14.9말) 2,261 [△30.4%]
- 대형대부업체 대학생대출 잔액(억원) : ('12말) 248 → ('14.12말) 51 [△79.4%]

<표> 금융위원회의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록금	▪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 29%		▪ 민간 금융권
생활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 2.9% · 연 200~300만원 (최대 1,200만원) ①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② 대학생·청년 햇살론¹⁾ 도입 [생활자금] (미소금융재단/신복위) · 대상 : 대학생 및 청년층 · 금리 ↓ : 6.5% → 4.5%²⁾ / 5.5%³⁾ · 한도 ↑ : 300 → 800만원 · 거치기간 ↑ : 1 → 4 + 2년(군복무) · 상환기간 ↑ : 3 → 5년 [고금리 전환대출] (신복위) · 대상 : 대학생 및 청년층 · 금리 ↓ : 6.5% → 5.5% · 한도 : 최대 1,000만원 · 거치기간 ↑ : 無 → 4 + 2년(군복무) · 상환기간 : 7년	④ 저축은행 등 지도 강화 ·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 상품 우선 이용토록 안내 강화 · 기존 차주에게 저금리 제도 개별 안내 · 고금리 대출 취급 자제, 대출심사 철저 등
채무조정	③ 대학생·청년 신용회복 지원 강화 (신복위) ·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층(신규) · 감면률 ↑ : 최대 50% → 최대 60% · 유예기간 ↑ : 대학 졸업시까지 유예, 졸업후 미취업인 경우 2년 → 최장 4년까지 유예		

2. 정부정책의 한계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존재한다. (2015년 기준 약 7.0만명) 최근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대학생과 함께 청년층에 대한 금융애로해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생·청년들이 정책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금융생활에 대한 근본적이 교육이 필요함.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이 아닌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3. 지방정부의 청년금융정책

1) 서울시

서울시는 2015년 이후 변화된 청년금융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청년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고 서울형 청년 그라민은행을 설립하였다. 기존의 청년층 부채경감과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서울형 청년그라민은행 설립을 통한 ONE-STOP 통합 금융지원체계 구축하였다. 그라민은행은 채권매입, 채무대리, 채무조정, 신용&채무상담, 개인&창업 대출, 위기지원, 창업컨설팅 등의 기능을 한다. 서울시 청년금융정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형 단계별 청년 신용회복 사업

- 기존 청년 신용회복지원 및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사업 혁신
- 고금리 → 중금리 →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통한 신용회복
-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상, 선 상담 및 후 대출 체계 구축
- 청년서민금융 전문가 제도

○ 위기상황 청년 생활안정 지원

- 장기간 구직과 부채상환, 공과금체납으로 인하여 생활이 잠식당한 위기 청년층 발생
- 1~2개월의 생활비 지원을 통한 구제
- 금융복지 선 상담만으로 빠른 체계 구축으로 빠른 문제해결 중심
- 복지체계 구축 및 사례 관리

○ 청년층 특화 신용&재무 상담과 교육 강화

- 청년층에게 특화된 상담과 교육 강화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접근성 강화
- 부채증가와 신용하락을 사전에 막는 예방정책.
- 기존 정부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민금융정책 효과 연계

2)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는 2011년 3월 경기도 최초로 지역재단을 설립하였다. 부천희망재단은 지우개 캠페인 등 각종 공익기금 조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신용불량 대학생 17명 학자금을 탕감해주었으며, 저소득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2,229만 원을 상환하였다. 부천희망재단의 청년 신용회복 프로젝트인 「지우개 캠페인」은 희망나눔콘서트의 수익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연체이자를 탕감해주는 형식이다.

3)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에는 청년금융회복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10월, 기금모금 운동으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프로젝트인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3개월 이상 연체 후,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손실 처리한 뒤 대부업체에 원금의 1~10% 가격에 넘기는 바람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추심사의 빚 독촉을 받게 하던 악성 채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실채권 소각으로 구제된 사람들은 앞으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파산 신청, 개인회생 등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추심업체, 종교계, 기업체, 시 산하 기관 등 각계각층 시민 성금과 채권기부로 이루어진다.

4. 청년연대은행 토닥(사회적 관계 은행)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2013년 설립된 청년층 중심 사회적 관계은행으로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마이크로세이빙(소액저축)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 100명의 청년층 대출 이용관계를 지수화 하여 신용도와 대출심사, 고립감이 큰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조합원 150명, 출자금 1500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조합원 335명 출자금 5,000만원이 되었으며, 대출이자 내 마음대로 정하는 자율이자로 정해서 냄. 현재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채무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을 위해 재무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부설기관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지트)’를 설립하였

다. 토닥의 부설센터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http://youthmoneyhabit.tistory.com>)는 돈 관리 1일 트레이닝코스, 꿈꾸는 재무관리 워크숍(가계부 작성 교육) 등 개최하고 있다.

VI. 해외 청년금융정책

해외의 청년금융정책은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1.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먼저, 미국의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은 대출 금리 인하, 일부 원리금 감면, 만기 연장 등을 중심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선별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대출손실을 최소화한다.

2. 자산형성프로그램

또한 미국 IDA, 영국 Saving Gateway, 대만 TFDA, 캐나다 Learn Save 등에서 행하고 있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은 저소득 빈곤층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3.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그리고 사적 채무조정의 형태가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NFCC, AICCCA, CCCA 등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미국 전역에 설치된 회원 단체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미국과 같이 CAB, SCDC 등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중재에 의한 사적 채무조정(DMP)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공적 기구인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4. 채무탕감정책 및 운동

다음의 형태는 채무탕감 정책 및 운동이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신용불량 빈곤층의 부채탕감 정책인 ‘뉴스타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6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미국의 고린도 15 롤링 jubilee(Rolling jubilee)운동이 있는데, 이는 학자금 대출 상환 거부 운동으로 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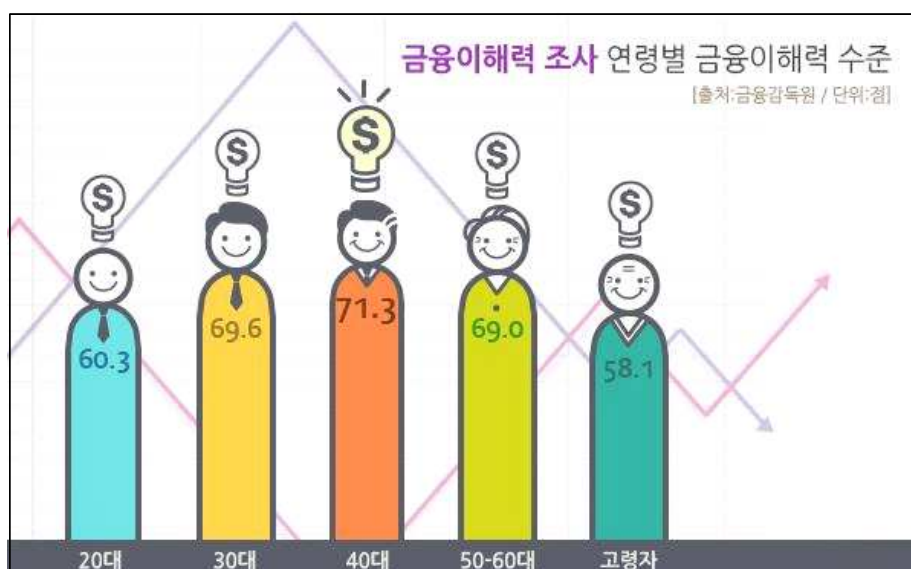
정부에게 빌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운동이다.

VIII. 수원형 청년금융정책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의 한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적합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제안은 위기청년에게 1차적으로 ‘금융복지’를 우선으로 하되, 2차적인 수단으로 개별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대출지원은 정부차원의 대출정책을 연계하는 방안 외에도, 서울시의 예와 같은 수원형 대출지원정책 수립이나 청년자조은행의 설립 등을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악순환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1. 청년통장 개설 운동 및 금융미리배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한 것도 소득 수준이나 교육,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특정 세대의 금융위기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적절한 대비를 위한 개인의 금융지식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금융감독원은 전국 성인 2,400명을 상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금융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40대의 금융이해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는 100점 만점에 71.3점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청년층인 20대(60.3점)는 미래대비 재무설계 등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청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차원의 지원과 대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 추진방향

정부의 청년금융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존재하고 있다(2015년 기준 약 7.0만명).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대학생과 함께 청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대학생·청년들이 정책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금융생활에 대한 근본적이 교육이 필요하다.

○ 사업개요

이자율 탕감 등 금융지원과 더불어 전혀 이행불능인 경우 복지의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재무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은행과의 연대를 통해 청년들에 특화된 예금상품을 개발하고, 계좌개설을 장려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전제로 청년들이 저축률을 증진시킨다.

이후 대출지원, 복지, 교육의 동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 관리에 대한 교육으로서 가계부 작성 교육과 같은 재무관리 워크숍 개최하고, 재무관리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금융지원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청년지원센터를 교육장소로 이용하고, 교육과정 등은 전문가에게 위탁한다.

○ 기대효과

채무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을 위해 재무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악순환의 예방을 통해 금융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을 위해 청년허브(가칭)에 방문한 이들을 타 프로그램 참여로 유도할 수 있다.

2. 청년 통합금융복지센터 운영 - 생활자금지원, 부채탕감프로젝트, 수원형 청년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 추진방향

- 청년허브(가칭) 내 청년금융복지센터(가칭) 운영
- 센터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프로젝트 진행
- 센터 운영사업으로 청년층 중심 관계은행 사업 지원
- 센터 운영으로 위기상황 청년 생활안정 지원

○ 사업개요

추심업체, 종교계,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성금과 채권기부로 기금을 조성하고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 맞춤형 단계별 신용회복 사업 운영. 청년 신용회복지원 및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고금리 → 중금리 →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통한 신용회복 /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상, 상담 및 후 대출 체계 구축하고, 청년서민금융 전문가 제도를 운영한다.

빛 탕감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금융기관이 채권 대부업체에 원금의 1~10% 가격에 넘겨 추심사의 빛 독촉을 받게 하던 악성 채권이 대상. 부실채권 소각으로 구제된 사람들은 이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파산 신청, 개인회생 등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청년들이 관계은행으로서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마이크로세이빙(소액저축)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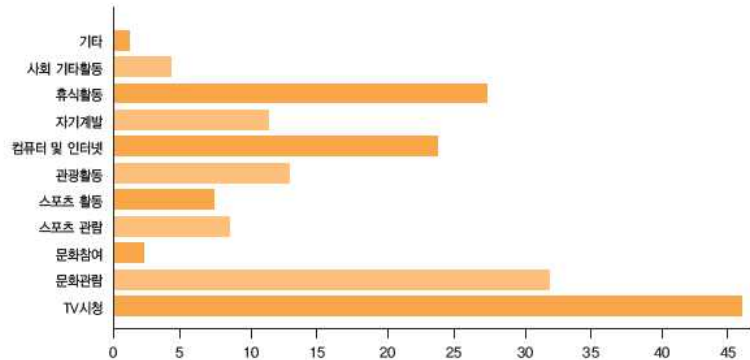
○ 기대효과

위기청년에게 1차적으로 ‘금융복지’를 우선으로 하되, 2차적인 수단으로 개별적인 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 교육, 지원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즐거움

청년 문화 정체성 강화 및 소통 교류망 구축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



- 휴일여가 대부분을 TV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소비함
- 청년들의 여가 및 문화환경의 변화가 시급함

📍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상징적인 청년의 거리 선정 + 문화 · 예술 · 관광 인프라 구축

📍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수원시민 의식계몽운동 실시 + 청년의 희망, "청년에게 듣는다" 특강 실시

청년의 문화 및 소통을 위한 정책 제언

제5장 즐거움, 청년문화정책

I. 청년문화정책 일반

1. 청년과 문화

문화란 넓은 의미로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Edward B. Tylor)³⁴⁾이며, 좁은 의미로 문화는 예술이다.³⁵⁾ 또한 예술은 “인간의 삶에 즐거움을 주고, 인생에 의미를 찾게 하는 원천”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된다.³⁶⁾ 뿐만 아니라 예술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예술활동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부가적 가치 혹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³⁷⁾

디지털 세대로 정의되는 청년층은 이러한 문화를 일상적 생활로 정의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 추구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를 추구한다. 또한 청년에 있어 문화는 다른 세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삶의 질에 있어 문화의 중요도와 문화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연봉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다. 삶의 질에 있어 문화의 중요도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대답이 50대 13.0%, 20대 20.0%로 나타났으며, 문화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연봉 포기를 감수할 수 있다는 대답이 50대 47.0%인데 반해 20대 58.0%를 나타냈고, 감수할 수 있는 연봉액 또한 약 350만원의 차이가 났다.

<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중요성

문항	세대별	
	20대	50대
응답자수(n)	300	3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0.0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1.7	1.7
보통이다	14.7	13.3
중요한 편이다	63.7	72.0
매우 중요하다	20.0	13.0

* 출처: 박영정,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2015)

34) 정철현,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15, 7쪽.

35) 정철현, 위의 책, 10쪽.

36) 이케가미 준, 1999: 237쪽.; 김정수, 좀비예술가와 별거벗은 임금님, 2015, 7쪽에서 재인용.

37) 김정수, 좀비예술가와 별거벗은 임금님, 2015, 7쪽.

<표> 문화생활을 위한 연봉 포기 정도

문항	세대별	
	20대	50대
응답자수(n)	300	300
연봉을 유지하고 문화활동이 있는 삶을 포기하겠다	42.0	53.0
연봉을 낮추더라도 문화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감수할 수 있다	58.0	47.0
감수할 수 있는 금액 평균(만원)	754.9	402.3

* 출처: 박영정,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2015)

2.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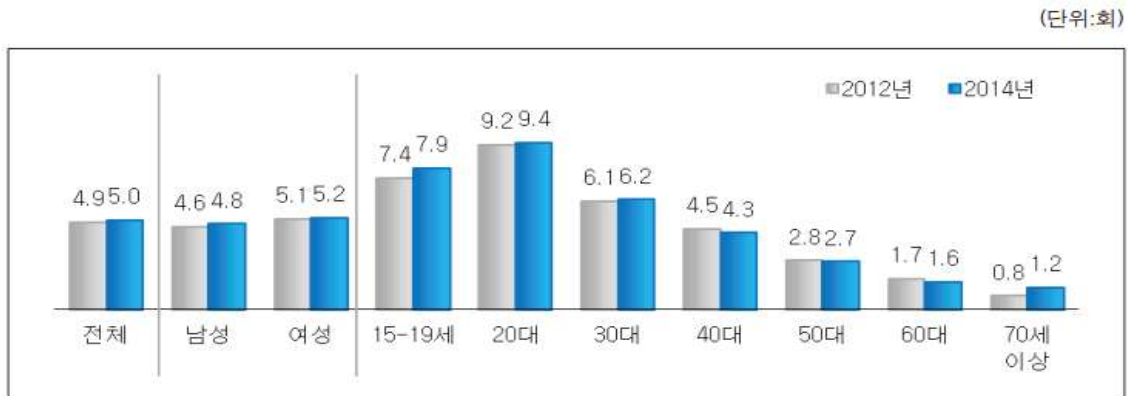
1) 청년문제의 악화

최근 청년 관련 정책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넘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주거문제,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청년금융문제 등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저성장의 장기화라는 진단이 제출된 만큼, 청년들의 생존과 빈곤문제는 일시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청년빈곤이라는 정책의제의 부상은 청년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보장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청년의 문화관심도

현재의 청년세대는 ‘문화세대’로 특징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세대이다. 이러한 현황은 공식통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림> 성별·연령별 예술행사 관람횟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예술실태조사

또한 현재 2030세대는 현실에 대한 불안을 문화로 극복하는 ‘문화열광족’, 문화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화려한 싱글녀’³⁸⁾라 불리며 전 세대를 통틀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청년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3) 청년 문화활동의 필요성

청년들 사이에 문화향유는 ‘문화생활’로 통칭되는데, 이는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간 문화의 생활화라는 과제를 중요하게 추진해 왔음에도, 가장 문화적인 세대 역시 ‘문화생활’을 일상적인 경험 외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의 생존과 생계부담에 쫓기는 상황이 가중될수록 이러한 의미는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화향유의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세대인 청년들에게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 만으로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를 통한 사회관계망의 구축’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청년세대는 문화세대인 동시에 디지털세대이기도 하다. OECD에서 실시한 사회관계 의존도 조사 결과에서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이나 관람을 통한 사회관계망 구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³⁹⁾

38) 서울문화재단, 2015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 2015.

39) 박영정, 앞의 책, 168쪽.

3. 우리나라의 청년문화정책

1)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는 고령화와 정책의 포용성을 감안해 2030세대를 청년의 범위로 설정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청년발전 정책 추진, 소통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사업

프로그램	내용
찾아가는 청년버스	취업·진로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 및 진로지도 멘토링
청년·기술창업교실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실전교육 프로그램
청년 YOU답	청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진로고민 해결 및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청년을 응원하는 토크 콘서트
2016 청춘순례	지역 출신 창업 선도자 중심으로 창업 트렌드 소개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
원원페이	- 청년과 고용주가 일 경험에서 서로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는 것 - 「원원페이 안내서」를 청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배포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문화창조융합센터와 연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산업 체험기회를 제공
궁 콘서트	창조경제 기반인력인 문화예술청년들의 고궁 무대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한류콘텐츠를 개발하는 '반짝 궁(宮) 콘서트 개최'
청년정책포럼	청년 이슈의 공론화의 장으로서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제고 및 정책수요 발굴

* 출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차원에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한국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진작가 지원, 문화콘텐츠 제작자 지원, 예술 및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공간 지원 등과 같이 창작자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⁴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사업전략은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과제로 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와, 생활 속 문화체감, 수요자맞춤형 문화복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대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와, 예술과출소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⁴¹⁾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은 최근까지도 ‘청년’의 틀보다는 예술인복지와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I. 해외 및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문화정책

1. 해외 청년문화정책

1) 일본

(1) 일본 문화정책의 특징

○ 지방정부 중심

일본의 문화정책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역 문화사업 활동을 지원한다. 1990년대 이후 문화의 영역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현저해지고 문화단체·지방공공단체·민간기업 등 3자의 파트너십에 의한 문화지원의 틀이 만들어졌다.⁴²⁾ 또한 일촌일품운동 등 지역문화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려는 노력으로 문화정책은 지방정부의 핵심정책이 되었다.⁴³⁾ 일본의 지역문화활동은 문화를 통한 도시창조사업과 예술가 체류사업으로 나뉜다. 도시창조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① 새로운 문화의 창조활동, ②지역문화시설을 활동거점으로 하

40) 박영정, 앞의 책, 105쪽.

41) 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2016/plan2016.jsp

42) 김동명, 일본의 지역문화정책 : 도야마켄(富山縣)의 문화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7, 295쪽.

43) 정철현, 앞의 책, 2015, 253쪽.

는 예술단체의 육성, ③예술문화의 지역 간 교류, ④지역 미술관 등의 기획전, 공모전 등의 충
 실, ⑤기타 계속적이고 특색있는 예술문화활동 등이다. 예술가 체류사업(Artist in residence)은
 1977년부터 시작하여 국내외 예술가가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체재하면서 창작활동을 함과 동
 시에 지역사회와 교류함으로써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사업내용
 은 ①국내외 초빙예술가에 의한 창작 및 발표활동, ②초빙예술가에 의한 지역주민에 대한 워크
 샵 실시 등이다.⁴⁴⁾

○ 기업 메세나

198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시작되었다. 1988년
 교토에서 개최된 ‘Japan-France Cultural Summit’은 문화가 마케팅이나 광고 전략의 측면을
 넘어 공공정책의 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
 한 노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⁴⁵⁾ 일본 문화정책에서
 기업 메세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기
 업 메세나가 필요한 것은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예술
 진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 메세나는 예술가의 창작 지원과 관람객의 소비 지
 원과 더불어 최근에는 전시활동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예술생산에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하여
 신진예술가와 실험적 예술에 대한 참가활동을 지원하는 생비자(prosumer) 지원을 시작하였다.
 또한 예술행정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술조직의 관리운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예술지원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⁴⁶⁾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1994년부터 ‘조성인
 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이 협의회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금을 기부할 때, 세제
 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제도는 문화청의 2012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추
 진되었다. 일본 기업메세나는 지원요청에 대해 해당 지역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지가 지원여부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적용한다. 또한 일본 메세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지역산업 쇠퇴,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초점
- 지역주민과 NPO와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⁴⁷⁾

44) 최철호, 일본의 문화입법과 문화정책, 2008, 83쪽 이하.

45) 송애정·김예성, 지역 활성화 전략 측면에서 본 일본 기업메세나 활동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2집, 2012, 183쪽.

46) 정철현, 앞의 책, 260쪽.

47) 송애정·김예성, 위의 글, 2012, 184쪽.

(2) 일본 청년문화정책

일본은 현재 국민 전반의 문화체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청년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전 국민 대상의 문화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인 문화체험 관람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신진인력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 일본은 문화예술 인력지원의 차원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신진 예술가들의 해외유학을 지원하고, 그들이 인프라를 조성하고 근본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예술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예술경영과 예술분야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⁴⁸⁾

<표> 일본의 청년문화정책

부문	주요내용
국민 대상 정책	- 문화예술에 의해 창의력·상상력 풍부한 어린이 육성 - 예술교육자(기획자), 전문인력의 육성·활용(문화접근성 증대) - 우수예술가의 육성, 전통예술 등의 후계자 전승자 양성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문화재 보존 수리의 근본적 강화 - 지역의 문화 자원을 살린 마을 만들기 - 창조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진흥
세계 문화교류의 허브	- 일본의 전통공예, 예술과 생활문화(의,식,주)의 해외 홍보 - 해외에서의 일본문화 소개 - 국내예술축제, 국제회의개최
시설 정비	- 조직·제도의 정비

* 출처 : 일본 문화청

48) 박영정, 앞의 책, 152쪽.

2) 독일

(1)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

○ 지방정부 중심

1990년 통일 이후, 지방 분권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제한된 권한만을 갖고 주로 지방정부가 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분권화된 문화정책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독일의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투자다”⁴⁹⁾라고 연방정부 문화담당자인 베르트 노이만(Bernd Neumann)이 언급할 정도로 연방정부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다.⁵⁰⁾ 연방정부는 문화의 정체성, 문화유산,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한다.⁵¹⁾ 또한 독일은 정부관련 기관 뿐 아니라 개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기관·저서까지도 동시에 참조하여 문화정책을 입안·결정한다. 그 기관으로는 ZfKf(Zentrum für Kulturforschung, 문화연구를 위한 센터), Institut für Kulturpolitik der kulturpolitischen Gesellschaft(문화정책관련 단체의 문화정책을 위한 연구소), Wissenschaftlicher Dienst des deutschen Bundestages(독일연방 의회의 학문분과) 등이 있다.⁵²⁾

독일은 기본법 제30조에서 문화예술을 주(州)의 소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는 문화정책국을 두고 지역특성에 따라 독자적 문화정책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⁵³⁾

- 프랑크푸르트의 대안문화

- 1983년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시는 문화의 민주화를 위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대안문화 단체에 지원을 하였다. 대안문화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문화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존 전시장과 공연장을 벗어나 다양한 유희공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융합한다. 예를 들어 식당을 빌려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도심의 골목길을 거닐며 건축 작품을 마주하고, 벼룩시장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형식이다.

- 바이에른의 음악진흥

- 바이에른 주는 주 헌법으로 문화국가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9) <http://krot.egloos.com/4165985>, 최종검색일 : 2016. 04. 26.

50) 안정오, 독일의 문화정책 - 베르린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37, 2011, 64쪽.

51) <http://cafe.daum.net/socialworkerchoi>, 최종검색일 : 2016. 04. 26.

52) 안정오, 위의 글, 한국학연구37, 2011, 65쪽.

53) 정철현, 앞의 책, 264쪽 이하.

특히 주 특성상 스포츠보다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해 음악진흥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으로, 인생 전체의 모든 교육에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 없이 누구나 음악가를 직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베를린의 복합문화공간

- 베를린은 특히 통일 후 버려진 공간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며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함부르거 반호프 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은 과거 동독과 서독의 비무장지대에 방치된 낡은 기차역을 개조한 것이다.
- 쇠네베어거 쥐드겔랜더 생태공원(Natur-park Schöneberger Südgelände)는 동서독 국경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숲이 된 것을 생태공원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숲을 보호하면서도 탱크 등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여 시민의 쉼터와 예술교육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는 시민과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이처럼 베를린은 버려진 사유지를 시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시민의 문화예술 경험의 장소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 다문화 정책

독일의 문화정책은 서독과 동독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독일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특히 소외계층에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 문화사업으로 ‘교육연합(Bündnisse für Bildung)’을 조직했다. 독일은 이전 동독의 실업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까지 대상으로 문화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예로,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하고 주민들이 문화 인프라, 도시디자인, 건축물개선, 문화교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다.⁵⁴⁾ 또한 독일은 사회통합에 있어 언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주민에 대한 언어수업은 준비수업, 모국어수업, 이중언어수업이 있다. 언어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정책은 학교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직업적·사회적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기본적 독일어 능력의 향상을 들고 있으며, 언어코스과 오리엔테이션코스로 이뤄진 통합코스(Integrationskurs)가 대표적이다.⁵⁵⁾

54) 정철현, 앞의 책, 263쪽.

55) 한상우,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10, 76쪽 이하

(2) 독일 청년문화정책

독일에 있어 문화교육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년도 이에 포함됨. 또한 문화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 증진과 비판적 인식능력, 미디어 이해능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⁵⁶⁾ 이런 의미에서 문화교육은 확장되고 있는 여가생활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미디어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의 기초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문화소외집단 없이 전 국민 문화예술 수혜자 만들기’로 문화교육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⁵⁷⁾ 이주청년, 외국인이 독일에 적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언어교육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속에 청년 또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영국

(1) 영국 문화정책의 특징

○ 자유방임적

영국의 문화정책은 자유방임적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영국 문화지원 본격화의 계기가 된 대영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중립적 조직으로써, 민간 예술조직을 선정하여 적자를 보전해주고 안정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대영예술위원회는 영국영화원(The British Film Institute)과 공예위원회(The Crafts Council)와 더불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영국 정부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의한 기관이다.

○ 문화의 민주화

영국 문화정책의 목적은 문화예술 향수 기회의 증대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영국은 문화예술 향수층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문화매체체육부(DCMS)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예술(arts for all)을 주장하고 누구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감상자 개발

56) 독일문화협회&문화교육진흥협회, 1988.

57) 박영정, 앞의 책, 147쪽.

을 위한 청소년 예술교육, 성인을 위한 워크숍과 강연회,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예술교육을 위한 워크숍과 강연 그리고 소외지역 무료티켓 배부 등이 있다.

○ 문화산업과 창조산업

지방정부는 도시재생 정책에 문화를 십분 활용하였다. 특히 영국 제조업의 근간이었던 조선과 철광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들은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였음. 영국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문화산업 뿐 아니라, 문화예술이 적용되는 산업 모두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예술이 순수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디자인, 게임, 패션 등 창조산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블레어 정부는 창조산업 태스크포스를 창설하고 창조산업 개념을 확고히 하고 전파시켜 정책실현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적 역할보다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다. 캐머런 정부의 창조산업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강조했다. 이런 창조산업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미래 혁신기술의 투자확대가 있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영국은 1970년대부터 대중음악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대표적 예는 아래와 같다.

- 셰필드 시는 피폐한 지역기반 제조업을 대신할 대체수단으로 대중음악을 활용했다. 음악을 고용의 원천으로 마련하고 지역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외부인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⁵⁸⁾
- 맨체스터 시는 음악인들이 요구하는 물리적인 공공인프라와 인허가제도, 국제음악관련 행사 개최지원 등과 같은 간접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간접개입 정책은 대중음악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소규모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간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⁵⁹⁾

하지만 제작 인프라 확충에 편중된 셰필드 시와 맨체스터 시의 사례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의 부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지역성장론의 많은 학자들은 지역 내 잘 발

58) Tony Bennett, Graeme Turner and John Shepherd, Rock and Popular Music: Politics, Policies, Instruments (London: Routledge, 1993)

59) 구문모, 영국의 대중음악과 지역개발 정책의 특성, 유럽연구 제24호, 2006, 403쪽.

달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변화무쌍한 시장에 신속히 적응하고 창의적 분위기를 도출하고 혁신 시스템을 배양하여 도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는 데에 동의한다.⁶⁰⁾ 이는 지역밀착형 문화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인프라보다 문화산업 인력 간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하는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¹⁾

(2) 영국 청년문화정책

영국은 예술이 개인의 잠재력 향상, 교육의 효과 향상, 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기조(『2014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에 따라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조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든 청년세대의 예술과 창조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영국 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영국예술 10년 계획』(2010)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을 통해 영감을 얻도록 지원’하고 특히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예술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Somewhere to...”⁶²⁾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지원하거나, 청년들의 예술체험 기회 증진과 청년 관객층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무료관람 회원제와 할인티켓 제공 등의 활동이 있다.⁶³⁾

영국 문화체육미디어부는 2016년 3월, 50년 만에 ‘문화백서(The Culture White Paper)’을 발간함. 문화백서에서는 첫 주제로 문화향유는 모두를 위한 것(Everyone should enjoy the opportunities culture offers, no matter where they start in life)임을 강조하며 전세대에 걸친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대해 강조하였다.⁶⁴⁾

60) Annelee Saxennian,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61) 구문모, 앞의 글, 407쪽.

62) 예술문화와 스포츠에 열정을 가진 16~25세의 젊은이들에게 폐허가 되었거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를 문화예술 활동과 스포츠의 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임.

63) 박영정, 앞의 책, 144쪽.

64) Department for Culture Media&Sport, The Culture White Paper(2016)

2.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문화정책

1) 서울 청년문화정책

서울특별시에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청년정책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나 청춘시장 외에도 ‘청년허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마을청년아지트’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 중 ‘설자리’와 ‘놀자리’ 분야가 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⁵⁾

□ 설자리 :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 ▶ 사회 밖 청년을 위한 청년활동지원 ▶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
-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저소득 장학생 지원

□ 놀자리 :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 ▶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지원(청년청, 무중력지대)
- ▶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 ▶ 정책거버넌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

또한 서울시 청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 청년 커뮤니티의 시작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공간 지원⁶⁶⁾

프로그램	내용
청년참	분야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청년활	구체적 프로젝트가 있는 청년단체(대표자 만39세 이하)에 최대 1,000만원의 프로젝트비를 지원
미달이사무실	청년허브 사무공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

65) 2020 서울시 청년정책-‘서울청년보장’ 발표 PT

66) <http://youthhub.kr/business/service01/>, 최종검색일 : 2016. 05. 05.

공모연구	청년문제에 따른 사회현상과 관련한 연구·조사 의지를 가진 청년 혹은 단체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청년이 원하는 해외 현장·전문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국내외 포럼 진행과 청년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플랫폼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교육 : 배움, 경험, 동료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⁶⁷⁾

프로그램	내용
청년학교	배움이 필요한 만34세 이하의 청년들이 4개의 전문현장에서(씨앗(국제교류), 문화로놀이짱(생산제작), 동대문DRP(도시재구성), 청개구리제작소(메이커기술)) 경험하며 배우는 학교(수강료 20만원)
청년허브 YLA	대학생 인문경영학교로,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이 은퇴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인문학, 경영학, 사회봉사 등을 배움.

□ 청년정책 :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법을 모색⁶⁸⁾

프로그램	내용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300명의 청년이 청년 당사자의 문제, 당사자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에 참여
기획연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과 함께 청년의 문제를 연구

청년허브는 제주도와 「제주, 청년을 묻고 말하다」라는 이름의 청년정담회를 공동개최하고, 청년허브의 청년활동을 모델로 하는 <부산청년포럼>의 설립에 함께하는 등 서울 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비빔밥의 문화정책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67) <http://youthhub.kr/business/service02/>, 최종검색일 : 2016. 05. 05.

68) <http://youthhub.kr/business/service04/>, 최종검색일 : 2016. 05. 05.

<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정책 아이디어와 정책제안

정책아이디어	정책제안
청년 예술가 관람 할인 서울시 청년 문화유산 지킴이 구 매표소를 활용한 문화예술로 신나는 지하철 역사 서울시 유휴공간(국위재산 등) 개방 정책 서울시 문화예술 지도 청년 예술 평가단 북크로싱 정책 제안 청년 강의 정책안	미래예술인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서울 미래유산지킴이’ 운영 미래예술인 공작실 공간활용 지원

서울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을 추진하고 있다.⁶⁹⁾ 이는 영아가 있는 가정에 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책을 매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독서의 형태인 ‘책 읽어주기’, ‘전국단위 책 읽는 동아리대회’, ‘기적의 자원봉사 프로그램’등이 있다. 특히, ‘한 도시 한 책’ 프로그램은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온 주민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하게하며, 독서와 토론문화를 북돋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행위의 범위를 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대개 한 권의 문학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된 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제 관련 활동과 토론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중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서운동이 도서관을 벗어나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즉 ‘아웃리치(outreach)’의 한 형태로써 시도된다.

2) 부산 청년문화정책

부산광역시 2013년 5월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위원회를 위촉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청년문화를 청년정책의 핵심에 두고 시 차원의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69)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문화사회연구소, 협동조합 성북신나,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성북지역을 중심으로, 2016, 47-49쪽.

부산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2014)과 『부산발전포럼』 (2014)를 발표하고, 2015년 3월 부산시 청년문화위원회 듣.보.잡을 발족시켰다.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경우,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예술인이 아닌 일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창업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두를 포괄하는 사업이다. 또한 부산시는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인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청년문화 육성·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첫 해인 2015년에는 음악창작소 조성과 청년 창작활동 지원사업 등을 펼쳤다. 2015년 10월에 개소한 음악창작소는 지역의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밴드 녹음이 가능한 리허설 스튜디오와 녹음실, 마스터링룸을 갖추어 부산 뮤지션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음반을 제작하고, 홍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시 문화재단의 활동 중 하나는 ‘청년문화집중지원’이다. 이는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의 이탈을 줄이고 청년문화예술의 선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인디문화 활성화, 젊은 예술가 해외 문화예술활동 등을 지원한다. 2014년 사업내용으로는 예술영재창작활동, 인디문화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젊은예술가 문화지원이 있다.

<표> 인디문화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사업명	내용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상설전시/공연, 기획전시/공연, 국제문화교류, 지역문화네트워크사업, 수익형 대관프로그램 운영 등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입주단체(21단체) 운영, 인디포럼, 시민문화예술강좌, 인디페스타, 오픈라이브 공연 등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쇼케이스 공연을 통한 청년연출가 5명의 공연 콘텐츠 확보와 본공연 제작지원

* 출처 :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2015년 사업내용으로는 젊은예술가 문화예술지원,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사상인디스테이션거점 청년기획사업,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이 있다.

<표> 2015년 청년문화집중지원

사업명	내용
젊은예술가 문화예술지원	- 젊은 예술가의 폭넓은 작품 활동을 위한 해외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력 및 예술적 잠재력 향상에 기여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 부산지역 젊은 예술가의 작품, 활동 등을 국내외 관련 행사에 소개하고,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국내외 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민락 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거리예술, 청년문화 프로그램, 인디 단체 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도시 정체성을 고려한 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인디 프로그램, 시민향유형 프로그램 운영, 인디 예술가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확산 효과를 기대
사상인디스테이션 거점 청년기획사업	- 청년문화, 인디문화, 대중문화 관련 공연 콘텐츠 기획하여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 타지역 우수공연 콘텐츠를 소개하고 지역 간 교류공연 개최를 통해 콘텐츠의 질적 향상 도모 - 대표 장르(댄스)를 특성화하고 육성하여 부산발 콘텐츠의 저력을 알리는 기틀마련 - 지역 청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활용 및 지원으로 지역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 - 문화다양성 확산과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운영으로 지역 문화네트워크 구축
청년연출가 작품 제작	공연예술분야 창작 의욕을 고취를 통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지역의 우수한 청년연출가 발굴을 통해 지역 공연예술계의 점진적 성장과 부산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 쇼케이스 및 본 공연 제작지원

* 출처 : 부산문화재단

또한 부산시의 문화정책 중 두드러지는 것은 ‘메세나 활성화 지원’이다. 주로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등을 위주로 이뤄지는 메세나 사업을 시 차원에 도입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목적: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메세나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부산광역시의 보조금과 기업체가 기탁한 기부금의 매칭을 통해 예술 활동 지원

□ 사업개요: 기간: 2015.1 ~ 12.

사업비: 1,000,000천 원(시비 300,000,추정예산 700,000), 지정기부금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술단체 신청접수, 기업체 홍보		기업 체결 신청	심의 및 선정	기부금 및 재단 매칭지원금 지원 사업 현장평가 기업체 인증패 전달 사업별 실적 및 정산보고							정산

* 출처 : 부산문화재단

□ 사업내용: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해당 예술단체에 대한 법인기업체의 지정기부금액에 대한 기금 매칭 지원

Ⅲ. 수원형 청년문화정책 정립

앞에서 언급한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 즉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간 운영, 청년 커뮤니티 지원, 메세나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별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큰 틀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복합문화공간 조성(가칭 ‘컬처박스 S’)

- 추진개요

수원시 청년예술가의 공연공간이 부족하여 청년예술가들이 공연을 위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연공간 부족으로 인해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수원시의 일반 청년들 또한 문화생활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수원시의 문화공연시설은 수원SK아트리움, 야외음악당 등 비교적 대규모의 좌석형 공연장이다. 이는 꿈을 키워나가는 단계의 청년예술가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며, 또한 청년문화의 중심인 밴드/힙합공연에 적합한 스탠딩 공연장이 부재하다. 따라서 청년들의 문화·예술·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정책대상

수원시의 청년예술가 및 일반 청년

- 주요내용

- 공연/전시, 상품 판매, 교육, 창작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조성
- 청년예술가에게 창작/공연/전시공간을 제공
- 기획/대관공연 및 전시로 수원 청년에게 문화향유기회 제공
- 문화동아리 플리마켓 개최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공간구성	추진내용
B1 라이브홀	○ 수원시 청년예술가 공연 (팀별 월 1회, 대관료 지원) ○ 지역공연단체 교류공연(수원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지원 및 공연기회 확대) ○ 인디레이블 기획공연(인디레이블과 협약체결 후 저렴한 대관료로 정기적인 공연 개최)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공개공연을 통해 선정된 아티스트에게 활동비 및 공연기회 제공, 연간사업)
1층 스토어/카페	○ 청년 아이디어 상품 판매 ○ 수원 청년 문화동아리 플리마켓 개최
2층 갤러리	○ 소규모 기획전시 개최 ○ ‘Suwon Youth Artist’ : 수원 청년예술가 작품 소개
3층 아카데미	○ 문화예술강좌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 청년동아리 공간 지원
4층 스튜디오	○ 수원 청년예술가 작업/연습공간 지원

- 기대효과

- 수원 청년들이 수원 내에서 다양한 문화향유 가능
- 지역 내 문화컨텐츠 발전으로 타지역 청년들의 방문과 경제 활성화 기대
- 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수원시 청년예술가 양성
- 복합적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으로 수원시 청년문화의 중심 조성

□ 인문도시 수원의 ‘인문극장’

-추진개요

수원시는 2011년부터 인문학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문학 중심도시 수원의 청년이 보다 인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로 인문학을 소개하며, 취업에 필요한 대외활동 기회를 마련하는 등 관련 활동으로 교육, 취업 등 다방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인문극장에서는 공연, 전시,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며, 수료과정생 및 기자단을 모집하여 수원시 청년들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한다.

- 정책대상

-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싶은 수원시 청년 및 수원소재 대학생
- 취업 준비 또는 사회활동으로써 대외활동 기회를 원하는 청년

- 주요내용

- 공연, 전시,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
- 수료과정생 모집 : 수료 시 수료증 및 수원문화공연 혜택
- 기자단 모집 : 작품 감상 후 온/오프라인 홍보, 수료증 제공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3월~6월, 9월~12월(4개월)
- 수료과정생 및 기자단 활동(대외활동)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제공
- 수료과정생 및 기자단 외에도 모든 청년들에게 참여기회 제공 (사전등록)
- 강연과 더불어 인문학적 주제의 공연, 전시,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폭넓은 관심과 흥미 유발

- 기대효과

- 청년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제공
- 청년들의 인문학적 소양 고취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
- 연계된 활동(수료과정생, 기자단)으로 수원 청년 간 네트워크 구성

□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Y스쿨(가칭)’

- 추진배경

수원시 청년모임(청바지)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던 문제점으로, 청년의 온/오프라인 관심사 커뮤니티의 구성이 필요하다. 청년 자기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적 문제로 지속되지 못하는 민간동아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 정책대상

-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접해보고 싶은 수원시 청년
- 관심 있는 분야를 공유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은 수원시 청년

- 주요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심사 공유, 모임 개설
- Y스쿨 구성원들이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ex. 그림 그리기, 글쓰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음식만들기, 음악축제 등)

- 추진계획

- 수원시 내 Y 스쿨 담당 관리자 임명
- 프로젝트 특성 상 필요한 재료비 외 활동비 무료
- 수원시 공간 제공 및 필요에 따라 대관료 지원
- 매년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시상

- 기대효과

- 관심사 공유로 인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 수원 청년의 취미 공유와 관심사 개발
- 교육기회 확대에 의한 삶의 질 향상

□ 청년 스포츠-리더십 프로그램

- 추진배경

취업과 사회참여에 의지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하다. 스포츠-리더십 프로그램은 교육적 지원 외에 사회참여 촉진으로 직접적 지원책보다 실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청년,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정 청년 등으로 대상을 분류하여 진행해, 더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다.

- 정책대상

- 사회 참여에 의지가 없는 청년
- 장애인 청년 및 다문화가정 청년
- 스포츠 활동으로 건강과 자신감을 찾고 싶은 청년

- 주요내용

스포츠와 연계한 리더십 트레이닝

- 수원시 소재 스포츠 구단 선수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 리더십 전문가 특강
- 건강단체, 수원시 체육회와 협력하여 전문가 특강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 추진계획

- 일정 : 3개월(월 2회 스포츠 활동, 월 1회 전문가 특강)
- 대상: 일반청년 / 대학생 / 장애인 청년 / 다문화 가정 청년
- 장소: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등 수원시 체육시설
- 프로그램: 수원시 스포츠 구단 선수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리더십 전문가의 특강, 공동체의식 증진 활동 등
- 강사 트레이닝: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확히 전달하는 트레이닝

- 기대효과

- 청년의 사회참여 도모와 정신건강의 증진
- 다문화가정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
- 장애인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

□ 스포츠 청년 대사

- 추진배경

수원시에는 수원삼성, 수원FC 등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구단과 월드컵 경기장과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관련 활동은 스포츠구단의 서포터즈 외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스포츠 청년 대사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수원시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마케팅으로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정책대상

- 수원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스포츠 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싶은 청년

- 주요내용

- 수원시 스포츠 청년 대사 모집
- 경기 홍보 및 관람, 행사 기획 및 진행 지원

- 추진계획

- 활동기간 : 6개월
- 활동내용 : 스포츠경기 및 행사 홍보 및 관람
- 혜택 : 수료증 및 경기관람 혜택 제공
- 스포츠 관련 활동을 청년이 직접 기획
- K-리그 등 경기일 행사 기획 및 운영
- 스포츠 경기 자원봉사 (자원봉사 시간 제공)
- K-리그 등 경기 시 행사 개최 지원

- 기대효과

- 수원시 스포츠 활동에 대한 홍보 효과
- 청년이 기획하는 스포츠 행사 주최로 청년과 시민의 참여 촉진
- 수원시 청년 대외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수원 문화정책 평가단 운영

- 추진배경

수원시 문화정책에 대해 문화참여에 가장 관심이 많고 대외활동이 필요한 청년들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한다. 청년이 수원의 문화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정책대상

- 수원시 문화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 수원시 문화정책에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청년

- 주요내용

- 수원 문화행사 참여
- 수원 문화정책 담당자와의 만남
- 수원 문화정책 평가

- 추진계획

- 인원 : 약 20명
- 활동기간 : 4개월
- 활동내용
: 수원시 문화정책 담당자와의 만남을 통해 정보 제공과 객관적 이해를 도움
수원 문화행사 참여 시 자원봉사(봉사시간 제공, 선택)
청년 평가단의 평가와 개선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청년의 사회참여 증가
- 수원시 청년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평가로 문화정책 개선에 도움

□ 청년 토론의 장 ‘원손잡이’ 운영

- 추진배경

수원 청년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의 논의와 수원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다.

- 정책대상

-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사회문제를 함께 공유·토론하고 싶은 청년

- 주요내용

- 청년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 추진계획

- 월 1회 모임, 매 회 다른 주제로 토론
- 청년의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위한 수원시의 의견 제공

- 기대효과

- 청년의 사회참여 증대
-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결방안 모색

□ 수원시 메세나 활성화

- 추진배경

2014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 9조(조세의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메세나 활성화에 대한 수단이 마련되었다. 수원시에 소재한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교류처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 정책대상

- 수원시 소재 기업
- 수원시 문화예술단체
- 수원시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원 청년

- 주요내용
 - 매칭펀드
 - 기업공간 제공

- 추진계획
 - 기업 지원금 지방세 감면 혜택
 - 기업체 기부금 / 매칭기금 / 공간지원으로 분류
 - ▶ 기업체 기부금 :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에 활용
 - ▶ 매칭기금 : 기업체와 예술 단체를 1:1로 매칭 (*매칭펀드: 중소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수원시에서 예술단체에 추가 지원 (1:1))
 - ▶ 공간 지원 : 기업 소유 공연장 등 공간을 예술단체 및 청년문화활동에 지원

- 기대효과
 - 예술단체 운영 효율화 및 일반청년의 문화활동 환경 개선
 - 기업의 사회공헌도 증가

제6장 결 론

본 보고서는 수원시 청년정책은 크게 고용, 주거, 금융, 문화 분야를 중점연구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교육’이다. 취업정보, 주거/금융지식, 문화향유 등 모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만 청년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 세대를 아울러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정책은 수원시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교육의 장과 장벽 없는 사회구조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의 분야별 핵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청년다움에 해당하는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방안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한대로 청년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및 지원대상 범위를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지원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직 및 기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도를 기반으로 청년지원센터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정책실행력을 가진 조직으로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만의 기관으로서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돋움에 해당하는 제3장의 수원시 청년고용정책의 특징은 동반형·성장형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기구로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인 ‘수원시 청년 일자리 원탁회의(가칭)’을 중심으로 하는데 있다. 실업과 고용의 당사자인 청년은 물론 산업체 및 고용주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을 갖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정책이행수준 모니터링 및 수정노선 제시와 정책변경 등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수원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의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소통으로부터 도출된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비움채움에 해당하는 제4장의 주거 및 금융정책은 청년의 주거 자립성 강화를 위한 주거부담 완화, 맞춤형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한다. 여러 유형의 주거지원과 더불어 특히 강

조하는 것은 청년주거지원센터인 ‘주거공감’과 청년임차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보증자리 지킴이’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으로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정책 분야에서는 대출지원의 형태보다는 ‘금융복지’와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강조하였다. 1차적으로 금융지식이 낮은 청년세대를 위한 재무관리 워크숍, 자산형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채무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위기 탈출과 사회참여 유도를 도모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후 2차적인 수단으로 생활자금지원과 부채탕감프로젝트, 수원형 청년은행을 설립하여 청년 금융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즐거움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 제안한 문화정책의 중심은 문화향유기회 증대와 사회참여 커뮤니티이다. 청년예술가에게는 공연/전시의 기회를, 일반청년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컬처박스 S’를 필두로 하는데, 공연·교육·상품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인디레이블이나 지역공연단체와 교류하여 다양한 기획공연을 제공한다면 수원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청년 스스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커뮤니티인 ‘Y스쿨’을 운영하여 수원 청년의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 강세진,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새사연 이슈진단, 2014.
- 고용노동부, 2016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프로그램 guide book, 2016.
- 구문모, 영국의 대중음악과 지역개발 정책의 특성, 유럽연구 제24호, 2006.
- 김동명, 일본의 지역문화정책 : 도야마켄(富山縣)의 문화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7.
- 김정환 외 4인,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 연구, 국토해양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
- 김유선, 청년 일자리 실태와 대책 청년일자리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2015.
- 김정수, 좀비예술가와 벌거벗은 임금님, 2015.
- 김정아 외 2인, 청년가구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KREUS Working Paper Series, 2011.
- 김현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2년 평가와 과제, 부동산포거스 제86호, 2015.
- 대학내일연구소, 수도권 거주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보고서, 2015.
- 박영정,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2015.
- 변미리 외 4인,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 변창흠, 청년주거를 위해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와 빈곤 제106호, 2014.
- 서울문화재단, 2015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 2015.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문화사회연구소, 협동조합 성북신나,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성북지역을 중심으로, 2016.
- 수원시,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5.
- 송애정 외 1인, 지역 활성화 전략 측면에서 본 일본 기업메세나 활동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2집, 2012.
- 안선영,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지원방안, 청소년정책리포트 제29권, 2012.
- 안정오, 독일의 문화정책 - 베르린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7권, 2011.
- 이석환 외 1인,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5.
- 이수옥 외 4인,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 이수옥, 청년 저구먼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제560호, 2016.
- 이현석,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보조제도의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 이호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방안, 사회정책연합학술

- 대회 발표논문, 2014.
-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월간 복지동향 제196호, 2015.
- 임운택, 유럽의 청년실업정책: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9권 제3호, 2011.
- 전경숙,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2015.
- 정민우 외 1인, 청년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5집 제2호, 2011.
- 정철현,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15.
- 정희주 외 1인, 청년세대 1·2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9권 제2호, 2014.
- 최은영,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 최은영,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제106호, 2014.
- 최은영 외 8인,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 최은영 외 1인,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4.
- 최조순, 외 2인,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경기복지재단, 2015.
- 최철호, 일본의 문화입법과 문화정책, 2008.
- 추문식,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피터보겔(배충효 역), 청년실업 미래보고서, 원더박스, 2015.
- 한상우,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10.
- 황서연, 서울지역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업모델과 당면과제: 청년주거빈곤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제106호, 2014.

◎ 외국문헌

- European Commission, Fact Sheet - EU Youth Guarante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4102_en.htm)
- OECD, Local Strategies for Youth Employment -Learning from Practice, 2015.
- OECD, Youth unemployment rate
(<https://data.oecd.org/unemp/youth-un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
- U. Engelen Kiefer, Beschäftigungspolitik, Köln, 1995.

【 부록 1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정책 일람표

■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중앙행정기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중기청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K-move(해외취업지원)	기재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산자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여가부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사업
	대학청년고용센터	관세청	FTA전문인력 양성 사업
	NCC기반 능력중심 채용확산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NCS 개발사업확대	청년위	청춘순례
교육부	중소기업취업·창업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능력중심채용설명회
지방자치단체			
부산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
	풍력발전 고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고급트랙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조성, 운영
	청년 취업역량 향상사업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대구	기업인턴사업	충북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
	청년 창업 지원사업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대학 리크루트 투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인천	찾아가는 특성화고교 취업특강	충남	중소기업인식개선 프로젝트
	인천국제기구-MCE 커리어페어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취업지원플랫폼 구축사업	전북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광주	찾아가는 청년취업라운드테이블		공공기관-대학교 잡 멘토링
대전	일취월장 123 청년 인력양성사업	경남	취업멘토링 콘서트
	Good-Job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경남청년 EG 사업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서비스		주문식교육사업
울산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		IT 엘리트 양성사업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		설계엔지니어(CAD) 양성사업
세종	청년 취업역량강화 캠프		
경기	경기청년 뉴딜	제주	대규모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	-
--	------------	---	---

■ 교육훈련지원

중앙행정기관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외교부	다자협력전문가 파견 사업
	내일배움 카드제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양성 사업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문화시설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고용디딤돌프로그램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
	K-Move	산자부	에너지분야 인력양성 사업
	취업사관학교	환경부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 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생태 독성·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여가부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사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국토부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업대학	청년위	항공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교육부	재직자 후진학 지원		U-CITY 인력양성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해수부	행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산학 연계 사업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보훈청	국가유공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사내대학	관세청	FTA전문인력 양성사업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	농진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사업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산림청	탄소흡수원 특성화 사업
	출연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기청	중소기업 임직원 연수사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원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사업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지방자치단체			
서울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 훈련
	챌린지 1000프로젝트	경기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서울애피즈니스센터		빅데이터 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허브		고졸취업 활성화 사업
부산	제5단계 BB 21사업	경기	해양레저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경기북부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부산입체영상 아카데미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 지원 사업
	센텀맞춤형 콘텐츠전문인력양성 사업	충남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에너지분야 기초인력양성사업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부산모바일 앱센터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부산게임 아카데미	전북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인문사회·예체능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풍력발전 고급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고급과정 운영		이공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부산시립미술관 청년인턴사업		공공기관-대학교 잡 멘토링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원사업	경북	청년무역사관학교 운영
인천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경남	경남형 기업트랙
	해상풍력고출력발전기 핵심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		경남청년 EG 사업
	청년인턴사업		주문식 교육사업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일자리 창출사업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대전	취업지원플랫폼 구축사업	제주	IT엘리트 양성사업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설계엔지니어(CDA) 양성사업
세종	청년 취업역량강화 캠프		대규모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창업보육 지원사업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	--	--------------

■ 체험 및 인턴지원

중앙행정기관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	문광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고용디딤돌프로그램	산자부	중소·중견기업 인턴 사업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국토부	항공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 사업
기재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농진청	이공계·농학계 인턴쉽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산림청	해외산림인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기청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외교부	ODA 청년인턴		벤처기업공동채용·훈련사업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사업	청년위	청춘순례
행자부	자원봉사활동 지원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
지방자치단체			
부산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에너지 기초인력양성사업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
	풍력발전 고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고급과정 운영	강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부산시립미술관 청년인턴사업		대학생 부업활동 운영
	달리는 부산문화	충남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부산지역 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사업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대구	기업인턴사업	전북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인천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인문사회·예체능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청년인턴사업		이공계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광주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대전	일취월장 123 청년 인력양성사업		공공기관-대학교 잡 멘토링

	Good-Job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전남	잡콘서트
울산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경북	중소기업 인턴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		청년무역사관학교운영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	경남	경남청년 EG 사업
경기	고졸취업 활성화 사업	제주	기업체 인턴 사업

해외취업

중앙행정기관			
고용부	K-Move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외교부	월드프렌즈코리아	농진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
	ODA 청년인턴	산림청	해외산림인턴
지방자치단체			
제주	대규모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	-

공공일자리

중앙행정기관			
기재부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문체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박물관 전문인력 일자리 사업
미래부	출연형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사업
문체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일자리 사업	행자부	자원봉사활동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일자리 지원 사업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문화시설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	농진청	이공계·농학계 인턴쉽 운영
지방자치단체			

부산	벡스코 부산홍보관 안내요원 채용 사업	경기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사업
광주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	-

■ 지원금 및 보조금

중앙행정기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산자부	중소·중견기업(연구개발분야) 인턴 사업
	청년취업인턴 사업	여가부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사업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K-Move (해외취업지원)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		U-CITY 인력양성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 사업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보훈청	국가유공자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교육부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지원	산림청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기업 맞춤형반	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지원
	중소기업 취업·창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육성
	일반고 직업교육		창업기업 자금
미래부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환경부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생태·독성·위해성 평가전문인력 양성사업
산자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

지방자치단체			
서울	서울게임콘텐츠센터	경기	대 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부산	제5단계 BB (Brain Busan) 21 사업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별협약 보증지원 사업
	부산입체영상 아카데미	충북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에너지 분야 기초인력양성사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사업
	미음 풍력부품산업 협동화 단지 조성 사업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양성사업	전북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원사업		인문사회·예체능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대 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공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대구	기업인턴사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 사업	경북	중소기업 인턴사업
인천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경남	경남형 기업트랙
광주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		경남 하이(Hi) 트랙
대전	일취월장123청년인력양성사업	제주	기업체 인턴 사업
	Good-Job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		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경기	굿모닝론	-	-

창업

중앙행정기관			
고용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중기청	여성벤처 창업지원 사업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창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창업 인프라 지원 (창업보육센터) 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미래부	ICT분야 재도전 창업 지원		본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창조경제타운운영		창업기업 자금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청	재도전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창업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			
서울	창조전문인력양성 사업	경기	예비창업 프로그램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창업프로젝트
	서울애피즈니스센터		경기북부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사업
부산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경기문화창조 허브
	부산모바일 앱센터		슈퍼맨펀드 조성
대구	청년창업지원 사업		
광주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사업	충북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대전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충남	청년CEO500프로젝트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전북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경북	청년CEO육성 사업
	톡톡팩토리 조성 (제조업 창업 공간)		경북청년 물
세종	창업보육 지원사업	경남	창업아카데미
경기	굿모닝론	-	-

【 부록 2 】 수원시 청년정책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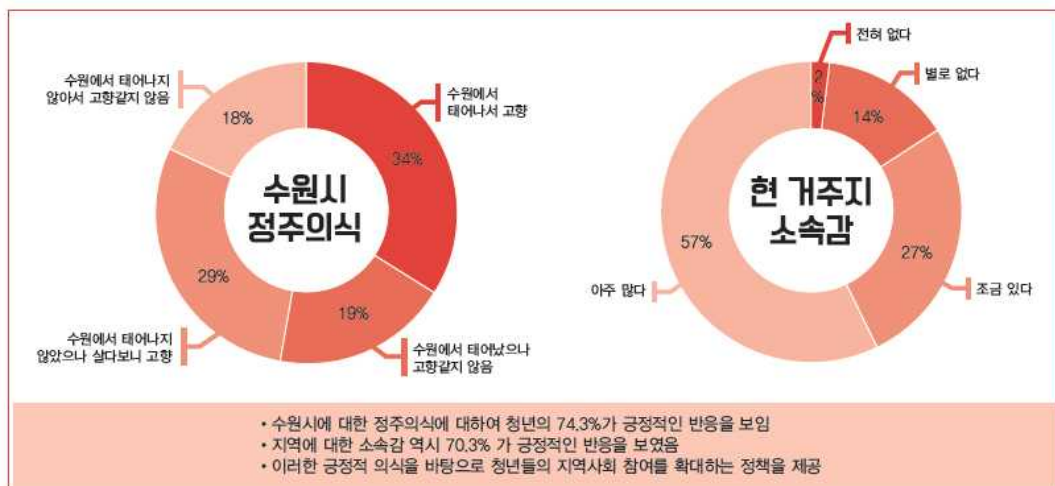


수원 청년들의 희망



청년다움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자기 발전 역량 강화



② 청년(시민) 휴식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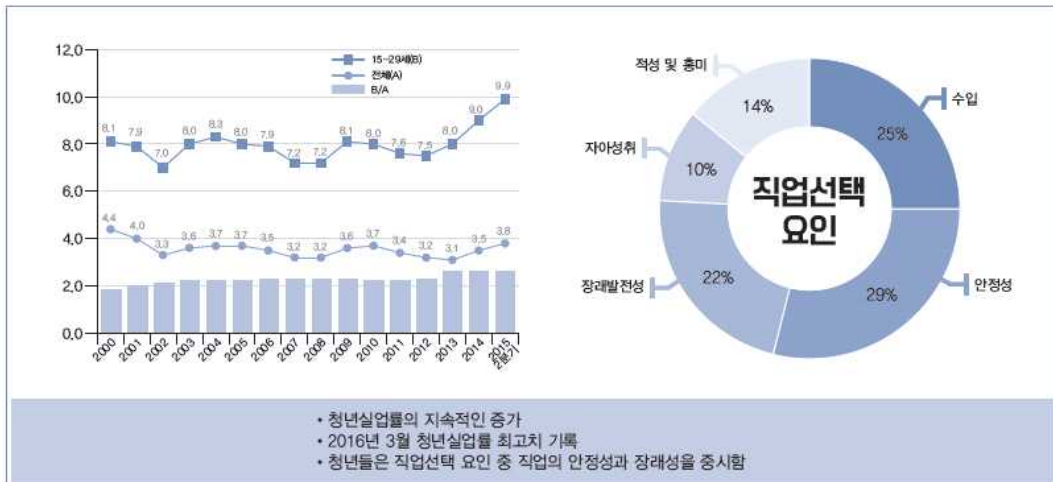
청년 문화예술 창작 및 교육, 공연 전시 공간 + 청년 생활체육 활성화

② 청년 토론의 장, "원손잡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의 의견수렴 + 민관 교류 활성화

발돋움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④ 취업청년 직무능력 향상 맞춤형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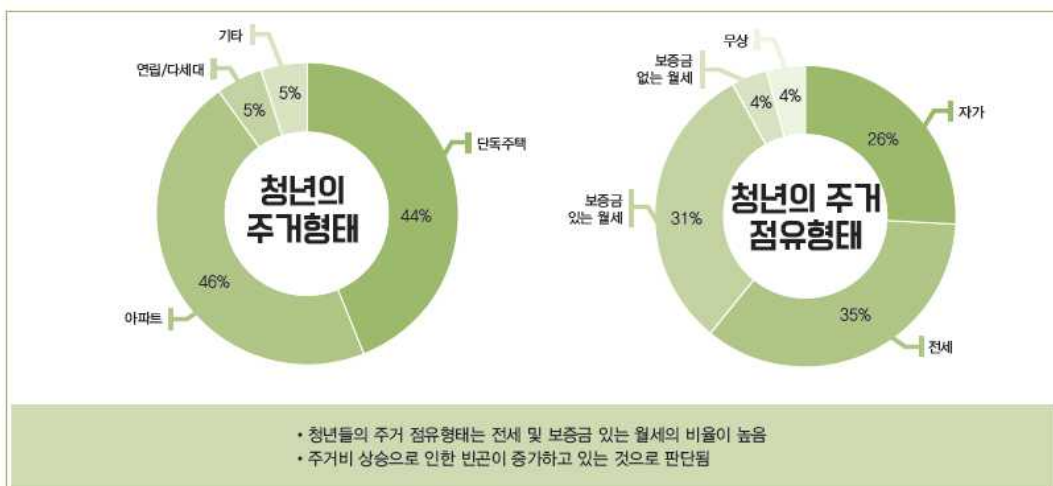
수원시 산업구조 특성에 맞춘 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직무인력 인증서 발급

④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조성

청년몰 기반 조성 + 창업교육 · 컨설팅 및 마케팅 · 홍보

비움 · 채움

생활안정(부채감) 및 청년 주거 자립성 강화



④ 민 · 관협력 「수원의宿」 장학관 사업

수원 출신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대상 기숙사 제공 + 기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④ 청년안심 희망대출 수원시 보증인제 실시

소규모 대출시 수원시가 보증인으로 참여 + 협력은행 청년저축상품 개발 및 가입

즐거움

청년 문화 정체성 강화 및 소통 교류망 구축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상징적인 청년의 거리 선정 +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수원시민 의식계몽운동 실시 + 청년의 희망, “청년에게 듣는다” 특강 실시

【 부록 3 】 수원시 청년정책 매트릭스

구 분	중고등학생	대 학생	취업창업준비/사회초년생	증장년	결 혼(가족의 구성)	출 산
청년다움	- 서울대 부지 청년(시민)휴식공간 조성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탄탄교육 - 이주배경(다문화) 청년 기술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 - 청!심!환(청년 심신안정 환경) 프로그램 운영 - 아르바이트생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 수원청년 인권보호 마스터플랜 - 청년-스포츠 리더십 프로그램 - 청년 토론의 장 '원손잡이' - 수원형 메세나 활성화 - 청년답게 헌법 읽기 - 금융미리배움터	- 서울대 부지 청년(시민)휴식공간 조성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탄탄교육 - 통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 아주 희망 프로그램 사업 참여 지원 - 청!심!환(청년 심신안정 환경) 프로그램 운영 - 청년-스포츠 리더십 프로그램 - 스포츠 청년 대사 - 수원 문화정책 평가단 운영 - 청년 토론의 장 '원손잡이' - 수원형 메세나 활성화 - 청년답게 헌법 읽기 - 금융미리배움터 - 청년연대은행 운영	- 서울대 부지 청년(시민)휴식공간 조성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탄탄교육 - 통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 청!심!환(청년 심신안정 환경) 프로그램 운영 - 위기탈출! Project - 단기인턴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 수원청년 인권보호 마스터플랜 - 청년-스포츠 리더십 프로그램 - 스포츠 청년 대사 - 수원 문화정책 평가단 운영 - 청년 토론의 장 '원손잡이' - 수원형 메세나 활성화 - 청년답게 헌법 읽기 - 금융미리배움터 - 청년연대은행 운영	- 서울대 부지 청년(시민)휴식공간 조성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탄탄교육 - 수원청년 인권보호 마스터플랜 - 청년-스포츠 리더십 프로그램 - 스포츠 청년 대사 - 수원 문화정책 평가단 운영 - 청년 토론의 장 '원손잡이' - 수원형 메세나 활성화 - 청년답게 헌법 읽기 - 금융미리배움터 - 청년연대은행 운영	- 서울대 부지 청년(시민)휴식공간 조성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탄탄교육 - 수원청년 인권보호 마스터플랜 - 금융미리배움터	- 서울대 부지 청년(시민)휴식공간 조성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탄탄교육 - 수원청년 인권보호 마스터플랜
발돋움	- 취업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취업청년 직무능력 향상 맞춤형 교육 지원 - 길거리캐스팅 필리버스터 -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 수원시 청년 일자리 원탁회의 -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 - 위기탈출! Project - 아르바이트생년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 수원청년 인권보호 마스터플랜 - 취업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 - 길거리캐스팅 필리버스터 -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일본)	- 수원시 청년 일자리 원탁회의 -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 -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Mini JOB 등 - 청년 첫 일자리 지원 - 직업심리상담 프로그램 - 취업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취업청년 직무능력 향상 맞춤형 교육 지원 - 길거리캐스팅 필리버스터 -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일본) - 청년사업가 해외교류 - 전통시장 청년 상인점포 개설 지원 -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조성 - 수원남문시장 야시장 조성 - 헤드헌팅 청년인력뱅크 운영 세상 밖 풍경 보기! 현장체험 - 대학생 및 청년층 인턴 사업 - 청년창업을 위한 보육센터 운영 - 미래산업 콘텐츠 활성화 지원	- 수원시 청년 일자리 원탁회의 - 직업심리상담프로그램 - 취업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전통시장 청년 상인점포 개설 지원		- 수원시 청년 일자리 원탁회의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추진 • 다산형 융합 연구마을 조성 지원 • 청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 지역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청년 멘토링 • 청년창업 푸드트럭 추진			
비움채움	•	• 대학생 희망드림 하우징 • 따로 또 같이, 청년을 위한 “Youth House”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한울타리” • 청년 주거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센터, “주거공감” • 민·관 협력 「수원의 宿」 장학관 사업 • 청년임차인 보호 보금자리 지킴이 • 희년(jubilee) 청년부채탕감 사업 • 수원형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 청년안심 희망대출 수원시 보증인제 실시 • 수원청년 보통의 행복한 삶 회복사업	• 따로 또 같이, 청년을 위한 “Youth House”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한울타리” • 청년 주거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센터, “주거공감” • 청년임차인 보호 보금자리 지킴이 •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주택공급 “수원형 파복마 올만들기” • 수원 이주 청년 초기정착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 희년(jubilee) 청년부채탕감 사업 • 희망두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 수원청년 보통의 행복한 삶 회복사업	• 따로 또 같이, 청년을 위한 “Youth House”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한울타리” • 청년 주거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센터, “주거공감” • 청년임차인 보호 보금자리 지킴이 •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주택공급 “수원형 파복마 올만들기” • 수원 이주 청년 초기정착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 희망두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 청년안심 희망대출 수원시 보증인제 실시 • 수원청년 보통의 행복한 삶 회복사업	• 청년안심 희망대출 수원시 보증인제 실시 • 수원청년 보통의 행복한 삶 회복사업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한울타리” •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주택공급 “수원형 파복마 올만들기” • 청년 주거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센터, “주거공감”	• 청년안심 희망대출 수원시 보증인제 실시
즐거움	•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 수원 청년 아티스트 나르샤 프로그램 •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 수원 청바지(수원 청년바람지대) 운영 • 수원시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청년이 꿈꾸는 정책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 • 온라인 청년 플랫폼(수원 청년 바람 지대) 운영 • 복합문화공간 컬처박스 S • 인문도시 수원의 ‘인문극장’ •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Y스쿨’	•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 수원 청년 아티스트 나르샤 프로그램 •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 수원 청바지(수원 청년바람지대) 운영 • 수원시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청년이 꿈꾸는 정책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 • 온라인 청년 플랫폼(수원 청년 바람 지대) 운영 • 대학생(청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운영 • 복합문화공간 컬처박스 S • 인문도시 수원의 ‘인문극장’ •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Y스쿨’	•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 수원 청년 아티스트 나르샤 프로그램 •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 수원 청바지(수원 청년바람지대) 운영 • 수원시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청년이 꿈꾸는 정책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 • 온라인 청년 플랫폼(수원 청년 바람 지대) 운영 • 아름다운 청년! 고마운 기업! 선정 시상 • 복합문화공간 컬처박스 S • 인문도시 수원의 ‘인문극장’ •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Y스쿨’	•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 수원 청년 아티스트 나르샤 프로그램 •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 수원 청바지(수원 청년바람지대) 운영 • 수원시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청년이 꿈꾸는 정책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 • 온라인 청년 플랫폼(수원 청년 바람 지대) 운영 • 복합문화공간 컬처박스 S • 인문도시 수원의 ‘인문극장’ •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Y스쿨’	•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 수원 청바지(수원 청년바람지대) 운영 • 수원시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청년이 꿈꾸는 정책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 • 온라인 청년 플랫폼(수원 청년 바람 지대) 운영 • 복합문화공간 컬처박스 S • 인문도시 수원의 ‘인문극장’	•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 수원 청바지(수원 청년바람지대) 운영 • 수원시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청년이 꿈꾸는 정책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 • 온라인 청년 플랫폼(수원 청년 바람 지대) 운영 • 복합문화공간 컬처박스 S • 인문도시 수원의 ‘인문극장’

구분		중고등생	대학생	취업준비/ 사회초년생	중장년	결혼 (가족 구성)	출산	비고(의견)
청년다움	수원형 메세나 활성화	◎	◎	◎	○	△	△	
	청년-스포츠 리더십 프로그램	◎	◎	◎	○	△	○	
	청년 토론의 장 '원손잡이'	◎	◎	◎	◎	○	○	
	청년답게 헌법 읽기	◎	◎	◎	○	○	○	
	금융미리배움터	◎	◎	◎	△	△	○	
	스포츠 청년 대사	◎	◎	◎	○	△	△	
	수원 문화정책 평가단 운영	◎	◎	◎	◎	◎	◎	
	청년연대은행 운영	△	◎	◎	◎	△	△	
	서울대 부지 청년(시민)휴식공간 조성	◎	◎	◎	◎	◎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탄탄교육	◎	◎	◎	◎	◎	◎	
	이주배경(다문화) 청년 기술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	◎	△	△	△	△	△	
	청!심!환!(청년 심신안정 환경) 프로그램 운영	◎	◎	◎	◎	◎	◎	
	아르바이트생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	◎	◎	△	△	◎	
	수원청년 인권보호 마스터 플랜	◎	◎	◎	◎	◎	◎	
	통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	◎	◎	○	△	△	
	아주 희망 프로그램 사업 참여 지원	○	◎	○	○	△	△	
	위기탈출! Project	△	○	◎	○	△	△	
	단기인턴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	○	◎	○	△	△	
발돋움	수원시 청년 일자리 원탁회의	○	◎	◎	◎	△	◎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	○	◎	◎	△	△	○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MiNi JOB 등	○	○	◎	△	△	○	
	청년 첫 일자리 지원	○	○	◎	△	△	△	
	직업심리상담 프로그램	○	◎	◎	△	△	○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	△	△	△	△	△	
	취업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	◎	◎	◎	◎	△	△	
	취업청년 직무능력 향상 맞춤형 교육 지원	◎	○	◎	△	△	△	
	길거리캐스팅 필리버스터	◎	◎	◎	○	△	△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일본)	○	◎	◎	△	△	△	
	청년사업가 해외교류	△	○	◎	○	△	△	
	전통시장 청년 상인점포 개설 지원	△	○	◎	◎	○	△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조성	△	○	◎	○	○	○	
	수원남문시장 야시장 조성	△	○	◎	○	○	○	
	헤드헌팅 청년인력뱅크제 운영	○	○	◎	○	△	△	
	세상 밖 풍경 보기! 현장체험	○	○	◎	○	△	△	
	대학생 및 청년층 인턴 사업	△	◎	◎	△	△	△	
	청년창업을 위한 보육센터 운영	△	○	◎	○	○	◎	
	미래산업 콘텐츠 활성화 지원	○	○	◎	○	△	△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추진	△	○	◎	○	△	△	
	다산형 융합 연구마을 조성 지원	△	○	○	○	△	△	

	청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	◎	◎	◎	△	△	
	지역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청년 멘토링	○	○	◎	○	○	△	
	청년창업 푸드트럭 추진	△	○	◎	○	△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	△	△	○	○	◎	
비움채움	대학생 희망드림하우징	△	◎	△	△	△	△	
	따로 또 같이, “Youth House”	△	◎	◎	◎	○	△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주택공급, “수원형 따복마을 만들기”	△	◎	◎	◎	◎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공급, “한울타리”	△	◎	◎	△	△	△	
	청년 주거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센터 “주거공감”	△	◎	◎	◎	○	○	
	청년임차인 보호 “보금자리 지킴이”	△	◎	◎	◎	○	○	
	수원 이주청년 조기정착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	○	◎	◎	○	○	
	민·관 협력 「수원의 宿」 장학관 사업	△	◎	△	△	△	△	
	수원형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	◎	△	△	△	△	
	청년안심 희망대출 수원시 보증인제 실시	△	◎	◎	◎	◎	◎	
	수원청년 보통의 행복한 삶 회복사업	○	◎	◎	◎	◎	○	
	희망두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	○	◎	○	△	△	
즐거움	복합문화공간 걸쳐박스 S	◎	◎	◎	◎	◎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원의 문화중심지
	인문도시 수원의 ‘인문극장’	◎	◎	◎	◎	◎	◎	인문학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Y스쿨’	◎	◎	◎	◎	◎	◎	그룹별 다양한 관심사 공유 커뮤니티
	수원형 청년특구 조성	◎	◎	◎	◎	◎	△	
	수원 청년 아티스트 나르샤 프로그램	◎	◎	◎	◎	△	△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	◎	◎	◎	◎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	◎	◎	◎	◎	◎	
	수원 청바지(수원 청년바람지대) 운영	◎	◎	◎	◎	◎	◎	
	수원시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	◎	◎	◎	◎	
	청년이 꿈꾸는 정책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	◎	◎	◎	◎	◎	◎	
	온라인 청년 플랫폼(수원 청년 바람 지대) 운영	◎	◎	◎	◎	◎	◎	
	대학생(청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운영	△	◎	△	△	△	△	
	아름다운 청년! 고마운 기업! 선정 시상	△	◎	◎	○	○	○	

※ 비고: 관련성에 따라 ◎ - 매우 강함, ○ - 강함, △ - 중간 정도, 관련성이 낮은 것은 표시 안함